

2023

9

Monthly  
Magazine

통권 238호



#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회세 경영저널 무

eAnSe.com

30분내  
Q&A답글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세청)

(Ⅰ. 부당행위개념, Ⅱ. 특수관계인, Ⅲ. 시가, Ⅳ. 경제적합리성)

### [주요정보]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중대세액공제 Q&A (국세청)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라-0129 · 등록일 2003  
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  
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2023. 9  
세무회계경영  
저널부  
당  
행  
위  
계  
산  
부  
인안  
안  
세  
건  
회  
조  
세  
법  
정  
인  
보





# 안세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5명 + 세무직원 286명 = 성실한 401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0년 매출액 535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 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 · 세무대리 · 회계 · 기장 · 재무 · ESG컨설팅 · 기업가치평가 · IFRS 적용 · 변환 컨설팅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 (Sox 서비스) · 금융자문 · 품질관리심리실 · 준법감시인 · 재경본부운영 · 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종 · 등기이사 장용석 · 김형석 · 고주현 · 안수현 등 75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두환 · 고영일 · 공희성 · 권창현 · 구수홍 · 김경수 · 김봉수 · 김수범 · 김수영 · 김영근 · 김옥철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형석 · 나경수 · 설찬수 · 박규태 · 박기훈 · 박병준 · 박상현 · 박정열 · 박지은 · 박근별 · 배익권 · 송형곤 · 양철성 · 유진우 · 유지운 · 윤훈기 · 이만선 · 이미지 · 이샤야 · 이승환 · 이원재 · 이종량 · 임권일 · 임정훈 · 조민기 · 조성민 · 조영우 · 제갈원구 · 진수미 · 표정협 · 최영근 · 최영진 · 한상표 · 허근 · 홍상연 · 홍재권 · 황준호 · 허진영(변호사 :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 · 광영미 · 김태현 · 이현섭 · 배문호 · 송태현 · 최민욱 · 신민석 · 조세용 · 황준호 · 정호신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 · 김용환 · 김수범 · 홍희빈 · 이혜리 · 강용희 · 김현단 · 선지우 · 이원규	
가산디지털본실	02-6011-5514	이남재 · 정현 · 허근 · 황창연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 · 이동계 · 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 · 이성태 · 양승민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고주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한철 · 유지운 · 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고경호 · 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원영민 · 강병훈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훈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이원재 · 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 이승환 · 이희건 + 5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종 · 손세정 · 홍재권 · 김형석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 안세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창업적 활동함.(02-829-7575)

-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이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이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 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 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외국 · 해외 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 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사외이사취임,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구성원 역할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 이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기업중여상속과 일반중여상속의 비교 ..... 2
- 가족간 분쟁예방하는 상속재산의 합리적 분할방법과 상속세 계산 ..... 3

## 이달의 특집

-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세청) ..... 4

## 경영정보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중소벤처기업부) ..... 84
- 고용중대세액공제 Q&A (국세청) ..... 119

## 9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1(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0(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9월) ..... 144

#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 핵심 point.....안세재경저널

### ◎ 가업증여상속과 일반증여상속의 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3/8/14일자 통권 1627호(표지)

개념구분	일반증여상속	가업증여상속
대상범위	일반 자산, 재산의 증여·상속 등	중소기업 경영자와 승계가족
자녀증여공제	증여액 -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	가업증여가액(600억원까지) - 10억원
적용세율	일반누진세율(10%~50%)	10% 단일세율(과표 60억 초과 20%)
100억원인 경우 증여세	$100\text{억} \times 50\% - 4.6\text{억} = 45.4\text{억원}$	$60\text{억} \times 10\% + 30\text{억} \times 20\% = 12\text{억원}$
자녀상속공제	총 상속재산 - 기초가족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가업상속재산 - [600억(30년 이상), 400억(20년 이상) 또는 300억(10년 이상)]
적용세율	일반누진세율(10~50%)	좌동
700억원인 경우 상속세	$700\text{억} - 10\text{억} = 690\text{억} \times 50\% - 4.6\text{억} = 340.4\text{억}$	$700\text{억} - 600\text{억}(30\text{년 이상}) - 10\text{억} = 90\text{억} \times 50\% - 4.6\text{억} = 40.4\text{억}$
부모요건	해당안됨	국내 거주자, 최대주주(지분율 40% 이상) 1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50% 이상 등
상속인 요건	해당안됨	18세 이상, 2년 이상 가업종사,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

## ◎ 가족간 분쟁예방하는 상속재산의 합리적 분할방법과 상속세 계산

- 안세재경저널 2023/6/14일자 통권 1627호(긴급시사해설)

개념, 구분	범위, 내용, 계산방법 등,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	사망 당시의 재산 + 의제상속 + 추정상속(유류분 계산시는 선증여분 합산,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상속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혈족 배우자는 1, 2와 공동순위, 없으면 단독상속
상속비율	같은 순위 상속인 간에는 균등하고, 배우자만 50%를 가산함(균등분×1.5배)
상속분할	① 피상속인의 유언이 우선 ②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③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부분 법정비율로 함)
특별기여	공동상속인 중 동거, 간호, 부양, 특별기여하면, 협의하여 기여지급액을 빼고 공동분배함
유류분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분의 50%,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유류분 합산범위	본래 상속재산 + 1년 내 증여재산 + 손해의도한 증여는 1년 이전 증여재산도 합산
상속세 신고	상속인의 신고·연대납부(민법상 고유재산 + 유증재산 + 간주상속재산 + 특별연고분여재산)
가산, 감액	합산 : 상속인 10년 내 증여 + 비상속인 5년 내 증여 + 1년 내 처분, 5억 이상 2년내 처분) 제외 : 비과세(문화재 등), 공익출연, 유족연금 등
공제금액	자녀 등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5억 ≤ 실제상속 ≤ 30억) + 금융상속공제 20%(≤ 2억) 자녀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의 기초공제는 2억원
상속세율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 50%



이달의

특 집

# 부당행위계산부인

— 국세청 —

## I. 총 론

###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및 취지

#### 1) 개 념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법상 적법·유효한 행위계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진실로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 장부상의 기초적 사실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66조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결정·결정권 등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부인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무효인 법률행위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 대법원 80누466, 1982.11.23. 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행위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임

또한,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인된 그 행위계산에 대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한 정상적 행위계산에 따라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므로 현실로 행하여진 행위계산 자체에는 어떠한 실체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91누13571, 1992.9.22.).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도 취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에 있음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둔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대법원 2006두125, 2006.11.10.).

즉,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 대법원 95누8751, 1996.7.26.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님

##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 1) 소득금액의 재계산 및 소득처분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행위를 부인하여 수정된 소득에 따라 계산하고, 이익을 분여 받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함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아울러,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구 분			소득처분
사외 유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1. 주주(주주인 임원.직원은 제외)	배당
		2. 임원 또는 직원(주주인 임원.직원 포함)	상여
		3.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타 사외유출
		4. 1~3 외의 자	기타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			사내유보

## 2) 거래 당사자에 미치는 효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행위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과세목적상 소득금액의 재계산을 위한 것임에 불과하며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응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저가로 양도한 법인의 소득금액만 재계산 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법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조정하지 않는다.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부담이 감소한 양도법인의 소득금액만 재계산함

- 양도법인 : 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저가양도에 따른 세부담 감소분 부당행위계산부인
- 양수법인 : 실질거래가액(저가취득액)으로 취득가액 계산  
→ 결과적으로 동 자산 양도 시 처분이익으로 과세

다만,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더하며, 일정한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분여 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더한다.

### 3. 다른 세법 규정과의 관계

####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기준, 시가 산정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 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세법」 상으로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어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인 개인에 대하여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의 관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고가 양수한 경우 이익 분여자인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이익을 분여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기준, 시가 산정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 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으로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우선 과세하며, 1998년 12월 31일 「법인세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란이 있었던 불공정 자본거래와 관련된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 분여 행위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 사외유출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 과세제도와외의 관계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국외의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자산의 무상 이전, 채무의 면제, 자본거래(합병, 신주인수권 등)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재저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적용대상 법인 + 특수관계 + 조세부담 감소 + 경제적 합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영리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도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산중에 있는 법인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1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법 제52조 및 영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이를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2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시 과세표준 계산】

-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행위 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거래성립 시기를 의미하며, 거래 계약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있었으나, 이행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법인 22601-872, 1986.3.17.).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르다면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거래계약 체결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 판례 대법원 88누5273, 1989.6.13.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52-8-5).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90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3).

다만, 특수관계법인 간의 불공정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판정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단서).

한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법원도 납세자가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통하더라도 최종적인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대법원 2002두11479, 2004.2.13.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판례** 대법원 2016두34014, 2016.6.10.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인 D건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A.B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인인 원고 C에게 분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원고 A.B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3) 해당 법인이 행한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조세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유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조세부담 감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대법원 95누7260, 1996.7.12.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사용인(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영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해당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
10.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 11의2.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14.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15.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해당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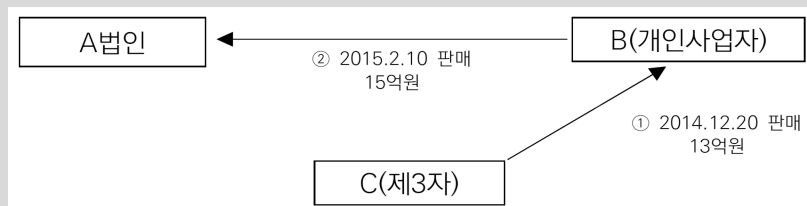
따라서 해당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 대법원 2002두1588, 2004.9.23.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거래행위 외에도 다음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

A법인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B 제조업체가 2014.12.20. C로부터 13억원에 매입한 기계장치를 2015.2.10. B로부터 15억원에 재매입함



## 5.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기준금액 요건

###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12가지로 분류되는 바, 이는 자산 및 금전 등의 거래와 자본거래, 기타거래로 구분할 수 있음

#### 가. 개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자산거래	① (제1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3호)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영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전 등의 거래	③ (제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영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사택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④ (제7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
자본거래	⑤ (제8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 ㉡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⑥ (제8의2호)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영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기 타 거 래	⑦ (제2호)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⑧ (제3의2호)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분할하는 경우 제외)
	⑨ (제4호)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⑩ (제5호)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⑪ (제7의2호)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⑫ (제9호)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부당행위계산 유형 판단 사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구체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해당하여 각 유형에 부합하는 과세요건을 특정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실권주 및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잘못 적용한 사례(대법원 2012두23488, 2014.6.26.)

실권주 고가 인수는 자본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자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주 간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임

####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의 최대주주(53.4% 지분 보유)로서 주식회사 A의 채무 180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있었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포함하여 3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150억원을 납입하였으며, 주식회사 A는 증자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A의 주식을 매각 한 후 149억원의 처분손실 인식함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인수한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그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후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함



## &lt;과세처분&gt;

피고는 원고가 유상증자 형식으로 신주를 고가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 459원과 인수가액 5,000원 차이 금액을 익금산입(기타 사외유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lt;판결내용&gt;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당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들고 그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법령 규정의 내용, 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 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배주주에게 임대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유형을 잘못 적용한 사례(대법원 2014두43301, 2017.8.29.)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배주주에게 임대한 것은 취득자금 대역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무상·저가 사용 및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함

## &lt;사실관계&gt;

원고는 '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지 981.8㎡를 434백만원에, 해당 토지의 지상 건물 274.5㎡(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를 1,164백만원에 각각 취득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

원고 법인의 대주주인 A는 토지·건물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1

년 5개월 이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주주 A 및 그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음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대주주 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인 대주주 A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음

#### <판결내용>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국내외 거래처 귀빈을 위한 숙소 및 휴식처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설령 그것이 대주주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명목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대주주 A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도록 한 것일 뿐,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A가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가 사용인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일시적인 사용수익권을 넘어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사택으로서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사용료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참고) 「법인세법」상 취급 비교>

구 분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지출
관련 규정	법 제27조 제1호 및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법 제27조 제2호 및 영 제50조 제1항 제2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함)</li> <li>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li> </ul>	출자임원 또는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에 대한 지출금

법인세법상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비·관리비 등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li> <li>•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유보)</li> <li>•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li> </ul>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 손금불산입(상여 등)
-------------	--	--------------------------------

## 2. 기준금액 요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별 기준금액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유형 : ㉠ 또는 ㉡ 충족(단,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는 제외)

㉠ 시가 - 거래가액(또는 거래가액 - 시가)  $\geq$  3억원

㉡ 시가 - 거래가액(또는 거래가액 - 시가)  $\geq$  시가  $\times$  5%

② 유형 : ㉠ 또는 ㉡ 충족

㉠ 이익규모 3억원 이상 ㉡ 이익률 30% 이상

③ 유형 : ㉠ 또는 ㉡ 충족

㉠ 이익규모 1억원 이상 ㉡ 이익률 30% 이상

④ 유형 : 이익규모 1억원 이상

구 분	세부 유형(영 §88①)	기준금액요건
자산· 금전 등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li> </ul>	① 유형
자본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호 가목(단,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익규모 요건만 적용)</li> <li>• 제8호 나목 중 신주 저가 . 고가 발행 &amp; 실권주 미배정</li> <li>• 제8호 다목</li> <li>• 제8호의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신주 고가 인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li> </ul>	②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호의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전환사채 등 인수.취득 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시</li> </ul>	③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호의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양도 시*</li> <li>* 단, 전환으로 인수한 주식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 요건 미적용</li> </ul>	④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제8호, 제8호의2</li> </ul>	없음
기타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호 중 자산.금전 등의 거래와 유사거래</li> </ul>	①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제9호 거래</li> </ul>	없음

### 가. 고가매입·저가양도 및 저리대여·고리차용

자산거래, 금전 등의 거래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경우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며, "기준금액 요건"이란 금액 기준과 비율 기준으로 구분하여 금액 기준과 비율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기준금액 요건(영 §88③)〉

구 분	기 준
금액 기준	시가 - 거래가액(또는 거래가액 - 시가) $\geq$ 3억원
비율 기준	시가 - 거래가액(또는 거래가액 - 시가) $\geq$ 시가 $\times$ 5%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기준금액 요건 적용 방법〉

구 분	2021.2.16. 이전 거래분	2021.2.17. 이후 거래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시가 - 거래가액 (또는 거래가액 - 시가)	시가 - 거래가액 (또는 거래가액 - 시가)
그 외 거래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나. 자본거래

일정한 자본거래에 적용되는 기준금액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시가와 의 차이가 3억원(1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 Ⅱ. 특수관계인

### 1. 특수관계인의 판정기준(연혁)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방을 기준으로 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만, 타방을 기준으로 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들 상호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2012년 2월 2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방(해당 법인)을 기준으로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해당 규정에서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쌍방관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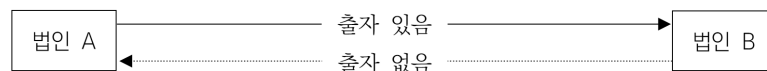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한편, 대법원은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다면 타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그들 상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였으나, 2011년 7월 21일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88누7248, 1991. 5. 28.)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변경하여 해당 규정은 일방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대법원 88누7248, 1991.5.28.**

**【사실관계】**



**【판결내용】**

법인 A는 B에게 출자하여 A,B간에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B가 A에 출자관계가 없더라도 A,B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판결요약】**

납세의무자인 B법인이 B법인에 출자를 한 A법인(B법인의 주주)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A법인이 A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은 B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특수관계는 성립함

**판례 대법원 2008두150, 2011.7.21.**

**【사실관계】**

A법인(원고)은 B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A법인의 주주 갑은 A법인 발행주식의 48.57%와 B법인 발생주식의 20%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



【판결내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과세관청은 종전의 쌍방관계 기준에 따라 A법인 기준으로는 B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B법인 기준으로는 A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쌍방관계 기준으로 판단할 입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A법인 기준) A법인의 주주인 갑(영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관계)이 보유한 B법인 지분율이 30%에 미달하여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 미성립
- (B법인 기준) B법인의 주주인 갑(영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관계)이 A법인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어 B법인과 A법인은 특수관계 성립

【판결요약】

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음

이와 달리 판시한 대법원 1991. 5. 28. 선고 88누7248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함

이에 따라,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국세행정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2월 2일 세법상 특수관계는 쌍방관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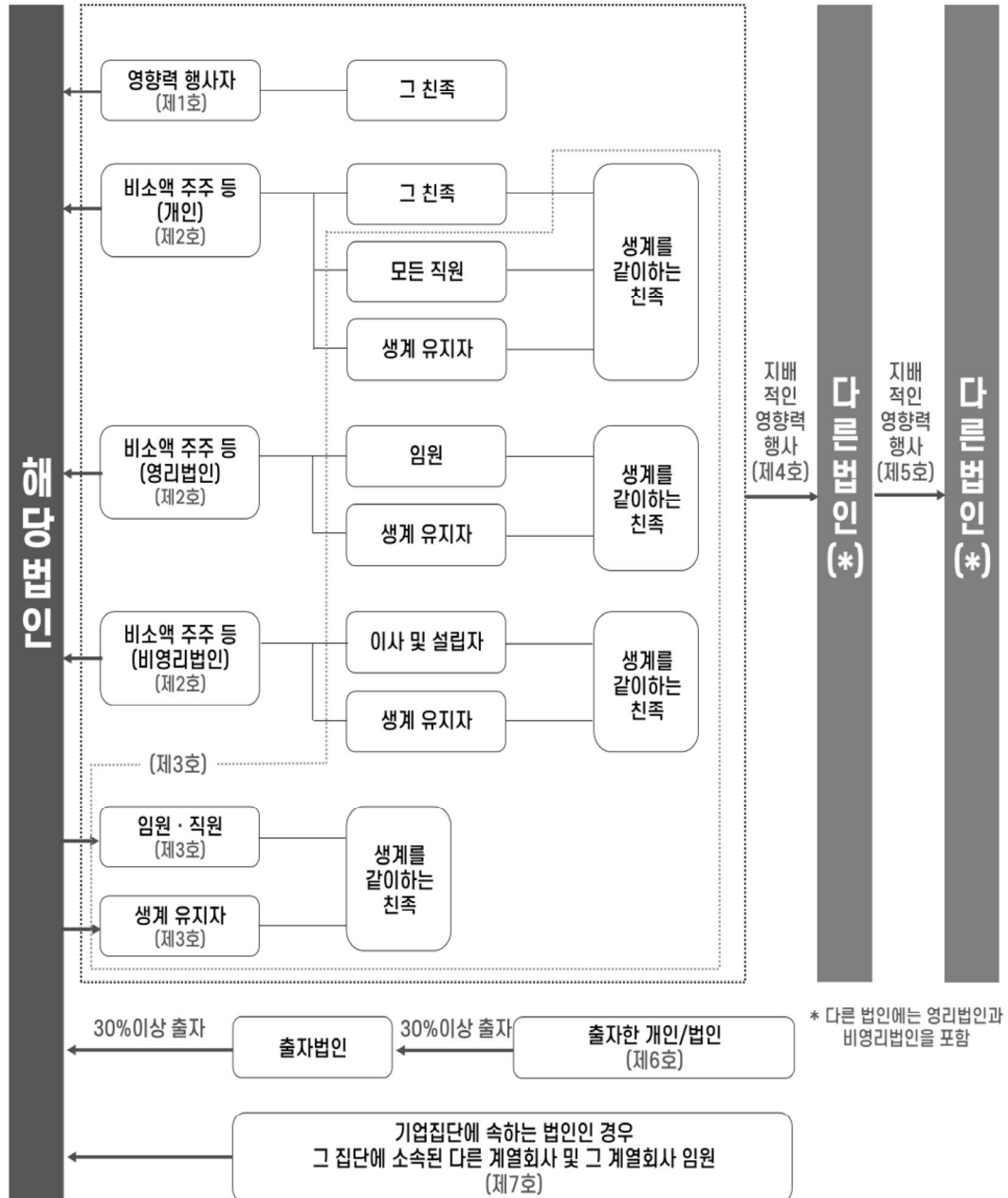
\* 2012.2.1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해당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영 제87조 제1항 전단 및 각 호는 2019.2.12. 개정 시 영 제2조 제5항으로, 쌍방관계기준을 규정한 후단은 2018.12.24. 「법인세법」 개정 시 법 제2조 제12호 후단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 2.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서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영향력 행사자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
제2호	비소액 주주 등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제3호	임원·직원·생계 유지자,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4호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5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6호	2차 출자 법인·개인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제7호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임원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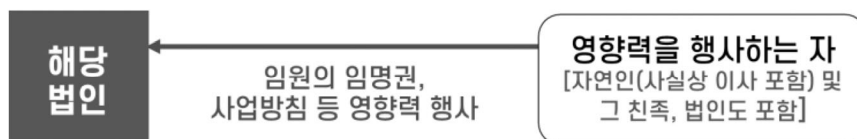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자로 한정하여 법령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을 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86누30, 1986.3.25.).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 2⑤)

## 1)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임원의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자연인에는 사실상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함

###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 가. 연 혁

1998년 이전까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분율에 의한 형식적 지배관계에 의해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부당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지배관계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1998년 12월 31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여기서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출연 및 출자관계와 무관하게 법인의 경영이나 사업방침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0, 2004.7.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A재단법인과 B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A재단의 출연자 및 C지주회사가 자회사인 B법인을 통하여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 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이사가 아닌 명예회장, 회장 등)도 포함된다.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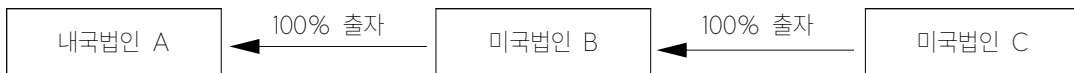
다만, 법인이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없이 경영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문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팀-1634, 2005.10.11.).

한편,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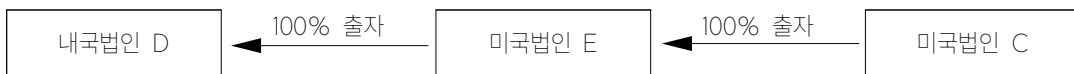
**예규 재법인 46012-13, 2002.1.18.**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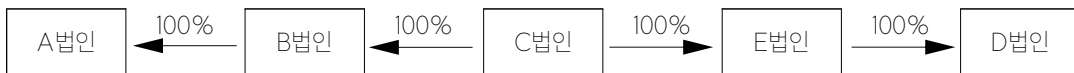
1. 내국법인 A는 미국법인 B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B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2. 내국법인 D는 미국법인 E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E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3. 내국법인 A와 D는 미국법인 C의 손자회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다.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이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① 6촌 이내 혈족
- ② 4촌 이내의 인척
-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1) 6촌 이내 혈족

혈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혈족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는 어느 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 쪽 혈연으로 이어진 부계혈족과 어머니 쪽 혈연으로 이어진 모계혈족으로 나뉜다. 법정혈족은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상 혈족으로 의제되는 혈족을 말한다.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도 구분되는데, 직계혈족은 친족 관계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혈연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직계라 하고, 이러한 직계 관계에 있는 혈족을 말하며, 방계혈족은 시조가 같은 혈족 중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으로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민법」 제768조).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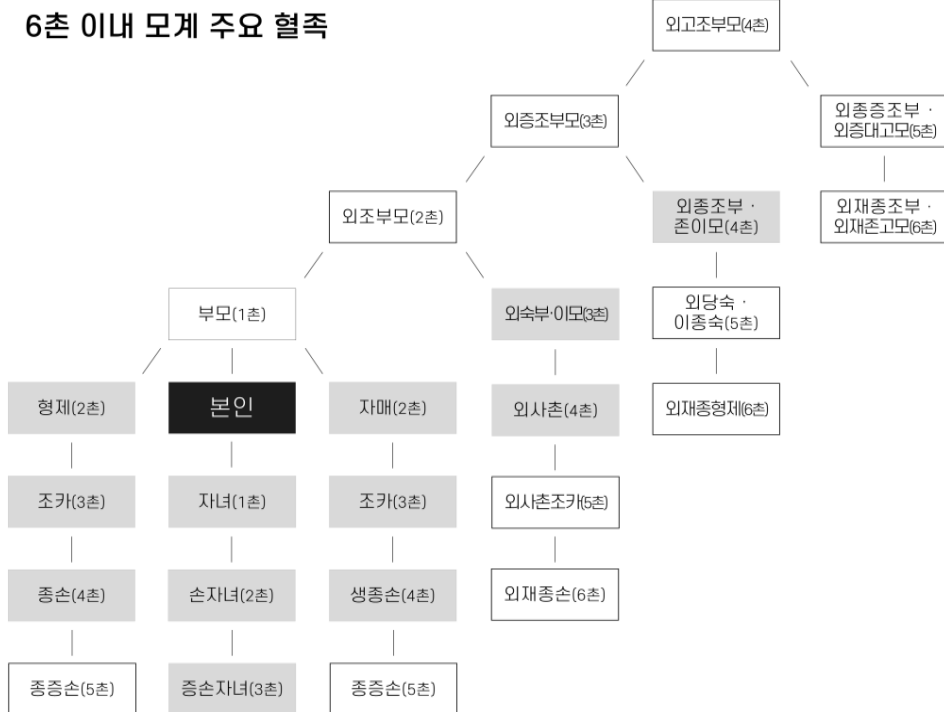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뉘는데,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자신보다 항렬이 높은 직계혈족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기의 자녀, 손자, 손녀 등 자신보다 항렬이 낮은 직계혈족을 말한다.

6촌 이내 혈족 관계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자료는 6촌 이내 부계·모계 혈족 중 주요 혈족만 표시한 자료이다.

<6촌 이내 주요 혈족>



6촌 이내 모계 주요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하며(「민법」 제769조),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되(「민법」 제775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로서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사망한 배우자와 관련된 인척관계는 종료된다(같은 조 제2항).

인척의 존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존수를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존수에 따른다.

**민법 제771조 【인척의 존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존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존수에 따른다.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혼인에 의하여 남녀는 배우자가 된다.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사의 합치를 비롯한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필요하다.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는 친족이 되며(「민법」 제777조), 이로 인하여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혼인의사 없이 어떤 방편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혼인으로 보아 혼인을 무효로 볼 수 있다(대법원 96도2049, 1996.11.12.).

종전에는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를 판단하였으나, 2012년 2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 해당 규정(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을 삭제하여 현재는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를 판단한다.

한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규**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2017.3.8.**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다.

「민법」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민법」 제908조의 3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된다(「민법」 제908

조의3 제2항). 다만,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는 「민법」에서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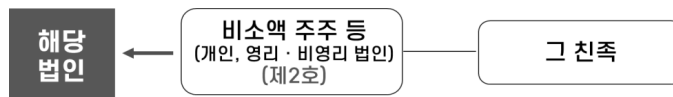
친족별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이 유	특수관계여부
며느리	1촌 혈족의 배우자로서 1촌 인척에 해당	여
배우자의 숙모	배우자의 3촌 혈족의 배우자로 3촌 인척에 해당	여
배우자의 조카	배우자의 3촌 혈족으로 3촌 인척에 해당	여
배우자의 외조부모	배우자의 2촌 혈족으로 2촌 인척에 해당	여
대고모의 남편	4촌 혈족의 배우자로서 4촌 인척에 해당	여
며느리의 부모 (사돈)	인척의 개념인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미해당*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에는 포함	부
사촌조카 배우자	5촌 혈족의 배우자로서 5촌 인척에 해당	부
당숙모	5촌 혈족의 배우자로서 5촌 인척에 해당	부
외사촌조카 배우자	5촌 혈족의 배우자로서 5촌 인척에 해당	부

## 2) 비소액주주 등과 그 친족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지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며, 기존 소액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 이상을 취득하는 때부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 가. 개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주주 등이란 거주자, 비거주자,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와 출자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나. 소액주주 등의 범위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

하는 주주 등을 말하며, 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기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예규**      **법인세과-826, 2010.8.30.**

**【질의내용】**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아닌 주주 A, B, C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등을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하는 것인지

**【회신】**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의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예규**      **재법인-230, 2003.12.22.**

**【질의내용】**

특수관계자 판단시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

(이유)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정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정하므로(국조령 제2조, 소령 제40조 및 법인 22601-1149, 1989.1.18.) 소액주주 이외의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됨

(이유) 「법인세법」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순히 발행주식총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보아야 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을 함에 있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갑설〉이 타당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액주주 등이 그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 이상을 취득하는 때부터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한편,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

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구 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	㉠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 . ㉡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 .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3) 법인의 임원·직원 및 생계유지자 등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해당 법인의 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는 그 영리법인의 임원,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가. 개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①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②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나. 임원 및 직원의 개념

"임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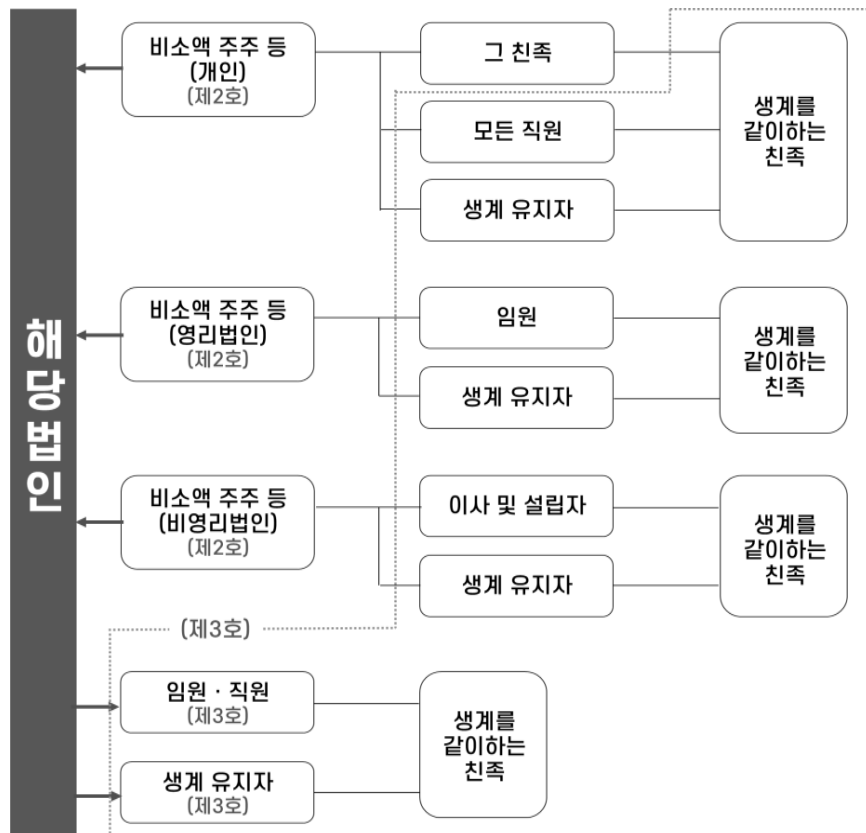
원과 청산인

-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④ 감사, ⑤ 그 밖에 ① ~ ④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직원"이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한다.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이란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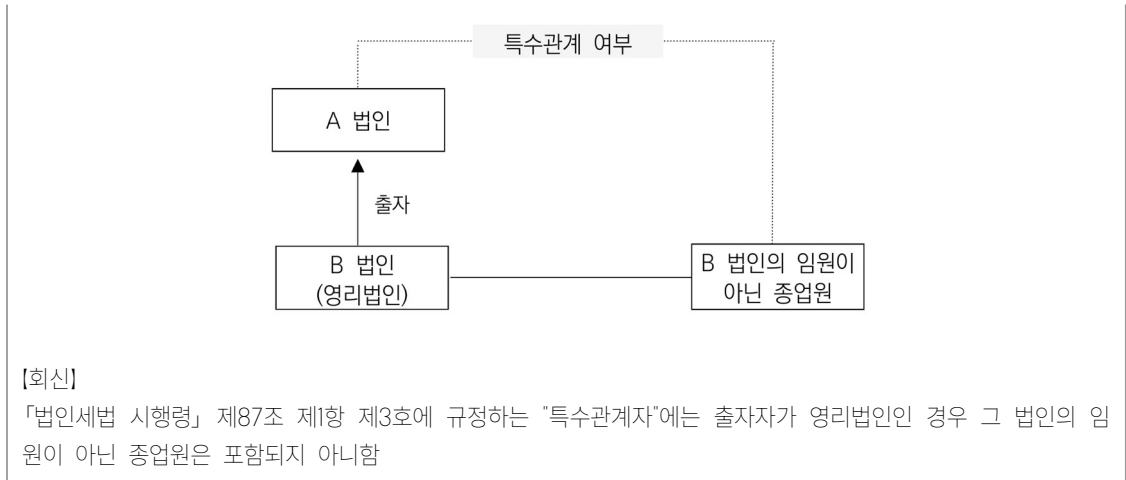
####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예규 법인46012-107, 1997.1.14.

#### 【질의내용】

특수관계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직원이라 규정한 바,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해당 법인에 출자한 영리법인의 종업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다.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개념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비소액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2...1 제2항).

**예규**    **법인46012-2350, 1998.8.20.**

##### 【질의내용】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보험모집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답설〉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됨

〈을설〉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보험회사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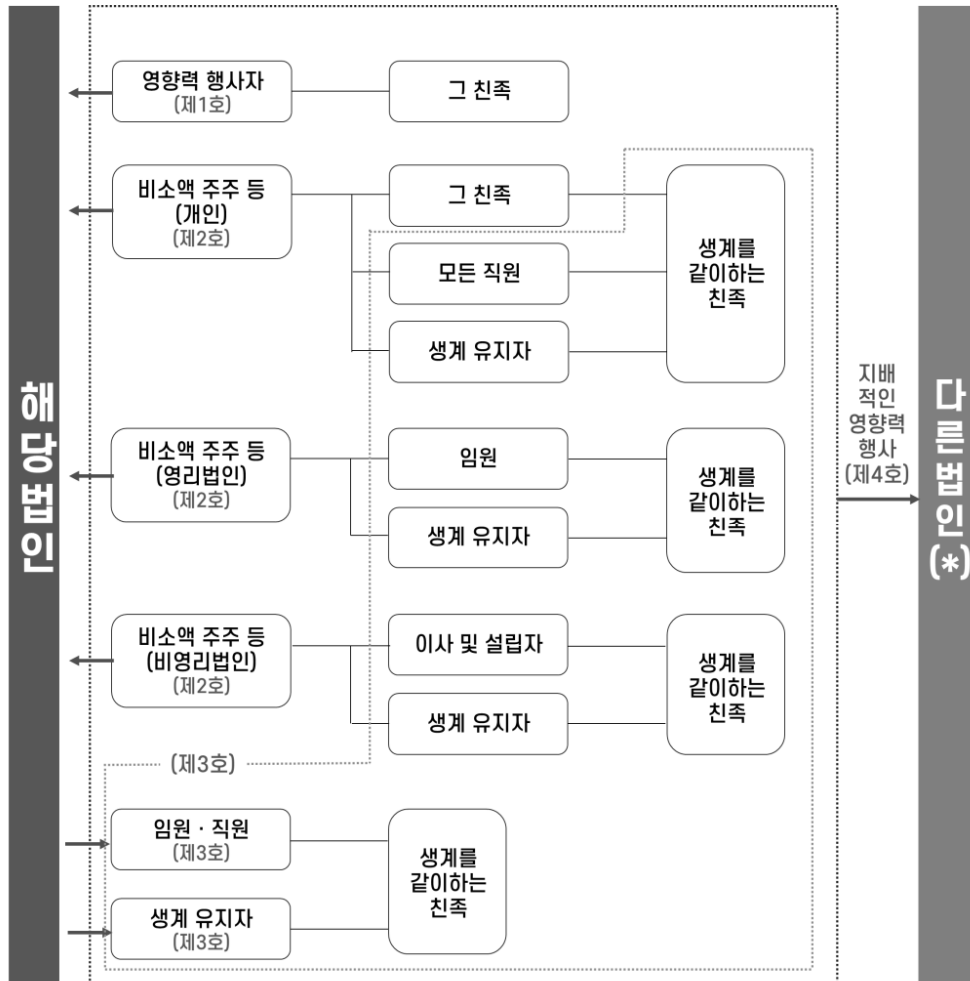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당해 보험회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현행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란 법인의 임원·직원,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2...1 제1항).



4)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 다른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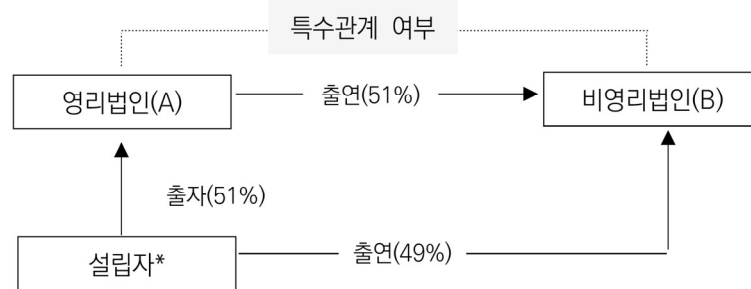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li> <li>•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비영리법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li> <li>•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li> </ul>

**예규 재법인46012-85, 2002.4.25.**

**【질의내용】**

'영리법인(A)'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A의 임원 등이 그 잔여출연금(50% 미만)을 출연하여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B)'을 설립하는 경우 A와 B의 특수관계 여부



\* 설립자 : 영리법인(A)의 주주임원이면서 비영리법인(B)의 이사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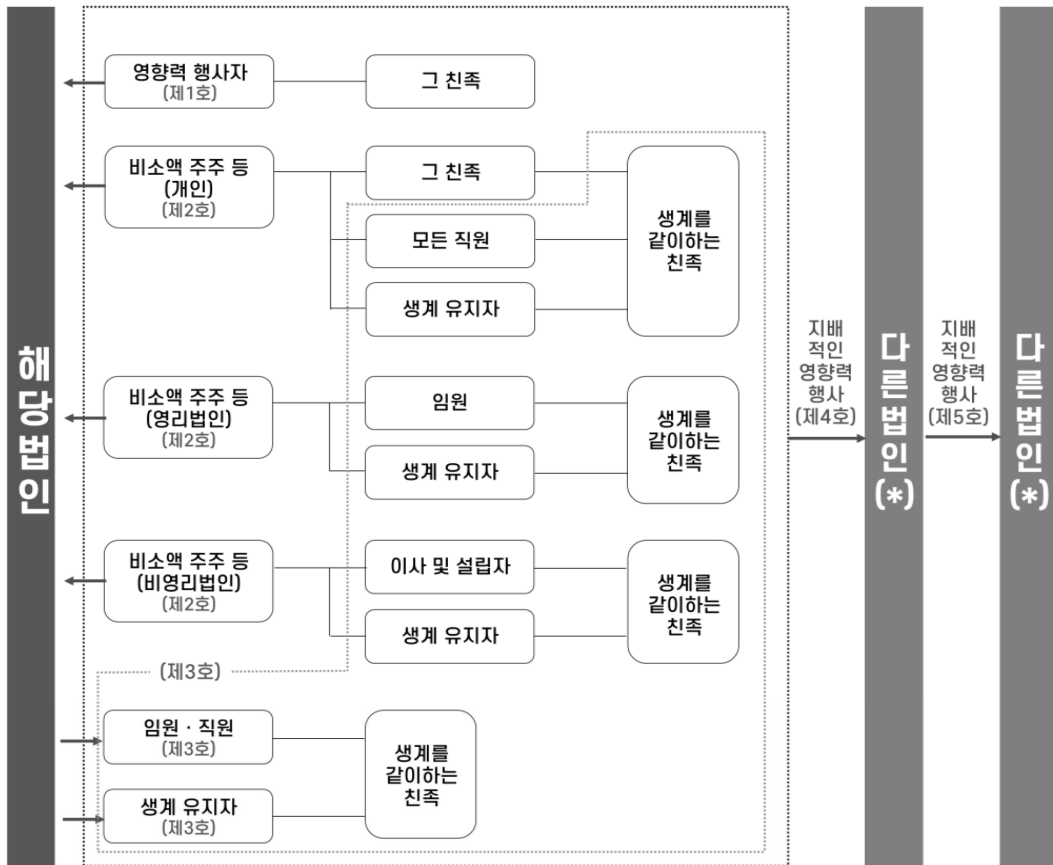
**【회신】**

'영리법인(A)'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A의 임원 등이 그 잔여출연금(50% 미만)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B)'의 경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5)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 다른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

6) 2차 출자 법인·개인 :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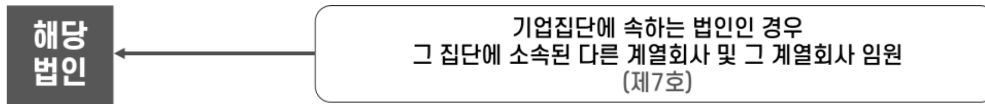
##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7)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임원

###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예규** 서면-2017-법인-1473, 2017.8.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III. 시가

### 1. 시가 적용의 원칙

#### 1) 일반적인 원칙

시가가 분명할 때는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봄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차례로 적용하되, 주식·출자지분 및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또는 제 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 시가평가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시가평가 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부터 제6항)
① 주식·출자지분	상장주식	시가
	그 외	시가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② 가상자산		시가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③ ①·② 외의 자산		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④ 금전의 대여·차용		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⑤ 자산의 임대		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 법인세법상 평가액
⑥ 용역의 제공		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 법인세법상 평가액

## 2)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가를 산정함

구 분		시 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거래가액
장외거래, 대량매매 거래 등	경영권 이전 수반	최종시세가액 +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경영권 이전 미수반	최종시세가액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 ② 대량매매 등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방법

이 경우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이하 "할증평가"라 한다)하며,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이상 변동되는 경우

한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①회생계획, ②기업개선계획, ③경영정상화계획 또

는 ④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③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④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할증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등 다음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원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의 연혁을 살펴보면,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 개정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반면, 그 외의 거래에 대한 시가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평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가산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였다(재법인-48, 2016.1.18.).

아울러,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해석하였다(서면2팀-2698, 2004.12.21. 외).

####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시가〉

구 분		시 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①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그 외 거래	경영권 이전 수반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평가액 +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경영권 이전 미수반	③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 ②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평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 ③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임(서면2팀-2698, 2004.12.21. 외)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장외거래·대량매매 등의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 수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가를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가〉

구 분		시 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① 거래가액
장외거래, 대량매매 거래 등	경영권 이전 수반	② 최종시세가액 +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경영권 이전 미수반	③ 최종시세가액

- ① 별도 규정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규정 적용
- ②·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 3)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및 기타 자산에 적용되는 시가

시가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비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며,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적용함

#### 가. 비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시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두26988, 2012.4.26.).

**예규** 대법원 2012두24863, 2014.11.1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24,000주를 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바로 그 날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주식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B증권 주식회사에 소외회사의 발행 주식 75,000주를 주당 100,000원에 양도한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당시의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를 실제 거래가격인 주당 100,000원으로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 나.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시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가상자산의 시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평가하였으나,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는 가상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시가 규정을 보완하였다.



###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시가〉

구 분		시 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①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그 외 거래	경영권 이전 수반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평가액 +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경영권 이전 미수반	③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 ②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평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 ③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임(서면2팀-2698, 2004.12.21. 외)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 > ② > ③) ①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방법 규정 ① (좌 동) ② 제외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제외대상) 가상자산 추가 ③ (좌 동) * 상증령에서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 평가일 전·후 1개월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가 산정방법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 기타자산에 적용되는 시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평가한다.

####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적용되는 시가

특수관계인과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 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가 규정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 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며, 변동금리로 차입함에 따라 차입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 나.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 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 <㉢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①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② 대여법인의 대여금리	③ 차입법인의 중평균차입이자율	비 고
4%	2%	3%	① ≥ ③
2%	4%	3%	② ≥ ③

- ②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③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9...3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3개 사업연도 적용 후 4차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연도별 당좌대출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9.1.1. 이후	2012.1.1. 이후	2016.3.7. 이후
당좌대출이자율	8.5%	6.9%	4.6%

## 5) 자산의 임대 및 용역의 제공 시 적용되는 시가

시가, 감정가액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이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평가액을 적용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시가, 감정가액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 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시가평가 방법 요약〉

구 분	시가평가 방법
유·무형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18년) 1.8% → ('19년) 2.1% → ('20년) 1.8% → ('21.'22년) 1.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용역의 원가 + (용역의 원가 × ① 또는 ②) ①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것과 유사한 용역제공

경우	<p>거래의 수익률*</p> <p>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p> <p>*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원가) / 원가</p>
----	--

## 2. 감정가액

### 1) 개요

단일 감정가액도 인정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함

"감정가액"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또는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평가 시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인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규 대법원 92누9913, 1993.2.12.**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인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감정목적이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가감정으로서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기초한 것인 한 법원이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시가의 산정기준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음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9...1**

**【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영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감정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단일 감정가액을 인정하고, 감정평가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교〉

구 분		「법인세법」 (영 § 89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 § 60⑤, 영 § 49)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균액)	2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가액의 평균액(단,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단일 감정평가 인정)
평가기간	원칙	규정 없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예외	규정 없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도 인정 가능 ① 동일 물건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상속·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것 ② 해당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③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는 등 감정가액이 부적합하지 아니할 것 ④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높을 것
감정기관 제재규정		규정 없음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 가능

## 2) 개정 연혁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액도 인정되며, 가상자산의 경우 2022년부터 시가가 불분명하더라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2004년 이전에는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2018년 2월 12일 이전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감정가액만 인정하였으나, 2018년 2월 13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는 감정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경우에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였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정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였다.

2021년 이전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도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대상에 추가되었다.

### 〈감정평가액 개정 연혁 요약〉

구 분	감정가액	평가기관	평가제외 자산
2004년 이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평가법인	주식 및 출자지분
2005.1.1. ~2018.2.12.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균액)	상 동	상 동
2018.2.13. ~2019.2.11.	상 동	감정평가법인(감정가액 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액도 인정)	상 동
2019.2.12. ~2021.12.31.	상 동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상 동
2022년 이후	상 동	상 동	주식 및 출자지분, 가상자산

### 3) 소급감정에 대한 입장

대법원은 거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감정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이하 "소급감정"이라 한다)한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해석(법인 46012-1355, 94.5.11. 외 다수)하였으며, 이는 과세시점에서 거래일 기준(평가기준일)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경우 등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때,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두6244, 2002. 6. 28.),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당시 시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0누4761, 1990.9.28.).

**판례** 대법원 90누4761, 1990.9.28. 외 다수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이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상 재산평가방법 비교>**

구 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법 § 61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역 : 개별공시지가, 특정지역 : 공시지가×배율</li> </ul> </li> <li>○ 건물(법 § 61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li> </ul> </li> <li>○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법 § 61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지정지역 내)</li> </ul> </li> <li>○ 주택(법 § 61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함)</li> </ul> </li> <li>○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법 § 61⑤, 영 § 50⑦, 규칙 § 15의2) : MAX [(1년간 임대료/0.12)+임대보증금, 공시지가 등에 의한 평가액]</li> </ul>	상증법 제61조 준용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법 § 61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역 : 개별공시지가, 특정지역 : 공시지가×배율</li> </ul> </li> <li>○ 건물(법 § 61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li> </ul> </li> <li>○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법 § 61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지정지역 내)</li> </ul> </li> <li>○ 주택(법 § 61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함)</li> </ul> </li> <li>○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법 § 61⑤, 영 § 50⑦, 규칙 § 15의2) : MAX [(1년간 임대료/0.12)+임대보증금, 공시지가 등에 의한 평가액]</li> </ul>	상증법 제61조 준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영 § 51②)</li> </ul>	상증법 제61조 준용
지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권설정 토지가액 × 연2%* × 잔존연수 고려한 현재가치상당액(영 § 51①, 규칙 § 16①②) * '22. 9. 1. 기준</li> </ul>	상증법 제61조 준용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 : (법 § 62①, 영 § 52①) MAX[①, ②]</li> <li>① 처분시 재취득가액, 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li> <li>②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 임대보증금+(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1+이자율)<sup>n</sup></li> <li>2) 1) 외 유형자산 : 임대보증금+(1년간 임대료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li> </ol> </li> <li>○ 서화·골동품(법 § 62②, 영 § 52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한다)</li> </ul> </li> <li>○ 상품·제품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법 § 62②, 영 § 52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시 재취득가액</li> </ul> </li> </ul>	상증법 제61조 준용
상장·코스닥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경우(법 § 63①(1)가, 영 § 5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증가 평균액</li> </ul> </li> <li>○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li> </ol> </li> </ul>	



상장·코스닥 주식	<p>까운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증가 평균액</p> <p>②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이전 2월 이 되는 날부터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증가 평균 액</p> <p>③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이 전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등 사유가 발생 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증가 평균액</p> <p>○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은 20% 할증(중소기업 등은 제외)(법 § 63③)</p> <p>○ 증자로 취득한 주식 중 상장되지 않은 신주(영 § 57③)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증가 평균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p>	법인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후단 적용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	<p>○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에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 월(중여세 부과 주식 : 3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 까지의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영 § 57) - MAX[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해당 주식등의 평가액(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 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p>	상증법 제63조 준용 + 법인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후단 적용
비상장 주식	<p>○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 :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 : 3)(영 § 54①)</p> <p>○ 1주당 순손익가치(영 § 56) 평가기준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순손익가치환원률) '22. 9. 1. 기준 -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과오납금환급금이자 등을 가 산하고 법인세액 등을 차감 계산 - 사업연도가 3년미만 법인 등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 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2이상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1주당 추정 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음</p> <p>○ 1주당 순자산가치(영 § 55)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총수 -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별 시가 또는 상증법상 평 가액으로 평가</p> <p>○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은 20% 할증(중소기업 등은 제외)(법 § 63③)</p>	상증법 제63조 준용 + 법인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후단 적용
국채·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	<p>○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영 § 58①)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증가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금액</p>	상증법 제63조 준용

<p>국채 ·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영 § 58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상당액</li> </ul> </li> <li>○ 그 외의 국채 등(영 § 58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 시 예상금액</li> </ul> </li> <li>○ 대부금 · 외상매출금 등 채권가액과 입회금 ·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영 § 58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에 대하여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이자상당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li> </ul> </li> <li>○ 집합투자증권(영 § 58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li> </ul> </li> </ul>	<p>상증법 제63조 준용</p>
<p>전환사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영 § 58의2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증가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금액</li> </ul> </li> <li>○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 중 주식전환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영 § 58의2②(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주인수권증권 :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 - 적정할인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li> <li>- 그 외 전환사채 등 :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li> </ul> </li> <li>○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 중 주식전환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영 § 58의2②(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사채 : MAX[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환금지기간 중 사채평가액</li> <li>② 주식으로 전환시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li> </ul> </li> <li>- 신주인수권증권 : MAX[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환금지기간 중 신주인수권증권평가액</li> <li>②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li> </ul> </li> <li>-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li> <li>- 신주인수권부사채 : MAX[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환금지기간 중 사채평가액</li> <li>② ① + 전환가능기간 중의 신주인수권증권평가액 - 전환금지기간 중의 신주인수권증권평가액</li> </ul> </li> <li>- 신주인수권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 전체 거래일 증가 평균</li> <li>② 그 외 : MIN[권리락 후 주식가액, (권리락 전 주식가액 - 배당차액)]</li> </ul> </li> <li>- 신주인수가액</li> </ul> </li> </ul>	<p>상증법 제63조 준용</p>

무체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권 (법 § 64) : MAX[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득가액 -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 상의 감가상각비 상당액</li> <li>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초과이익금액의 환산가액)</li> </ul> </li> <li>○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li> <li>○ 광업권 및 채석권 등 :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li> </ul>	상증법 제64조 준용
조건부 권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 권리(영 § 60①(1)) :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li> <li>○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영 § 60①(2)) :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li> <li>○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영 § 60①(3)) :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li> <li>○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영 § 60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 · 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li> <li>② 그 밖의 가상자산 : ①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li> </ul> </li> </ul>	상증법 제65조 준용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영 § 61①(1)) : MAX[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가액</li> <li>②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li> </ul> </li> <li>○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영 § 60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 :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li> <li>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div>	상증법 제65조 준용

정기금을 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정기금(영 § 62(1)) : MAX[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math display="block">\sum_{n=1}^n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text{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math> <math>n</math>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li> <li>②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li> </ul> </li> <li>○ 무기정기금(영 § 62(2)) : MAX[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년분 정기금액 × 20배</li> <li>②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li> </ul> </li> <li>○ 종신통정기금(영 § 62(3)) : MAX[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대여명의 연수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유기정기금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li> <li>②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li> </ul> </li> </ul>	상증법 제65조 준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 등으로 제공된 재산(영 § 63①) :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채권최고액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li> <li>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계산</li> <li>③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li> <li>④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li> <li>⑤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 :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li> <li>⑥ 「자동차저당법」등에 의한 자동차 등 단기소모성 재산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li> </ul> </li> </ul>	상증법 제66조 준용

## 4. 시가의 판정시기 및 입증책임

### 1) 시가의 판정시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당시인 계약 체결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익금산입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함

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일과 취득(양도)시기가 다를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정하는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88누5273, 1989.6.13.).

기획재정부는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해석하였다.

**예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결국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가와 거래가액을 비교하므로, 시가의 판정시기를 부당행위계산 판단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체계에 부합한다.

부당행위계산 판단시기 및 시가의 판정시기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판정시기
주식 매매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3, 2017.2.07.)
주식 교환	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과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의 계약내용이 같은 법 제36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승인된 경우, 해당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른 거래내용이 그 주식교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호를 적용함(법규과-0446, 2009.4.14.)
임대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함(법인-968, 2009.9.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행위 및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 기준으로 판단함(법규과-244, 2011.3.7.)

자기주식 취득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외화자산	내국법인인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인 A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 을법인에게 매매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일 현재의 시가로 거래가액을 산정하고 해당 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지급금액을 원화로 확정하는 것은 계약일 이후 환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법규과-0811, 2011.6.24.)
온실가스 배출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 2020.9.11.)
부동산 저가양도	법인이 당해법인의 출자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인46012-2057, 2000.10.06.)
불공정 합병	상법 제360조의 2에 의한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해당 자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경우에도 합병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80조 및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은 그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서이46012-11006, 2002.05.13.)
콜옵션에 의한 주식 양도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서면-2016-법인-5278, 2016.12.15.)
풋옵션 계약	갑법인이 을법인과 함께 A법인에 투자하면서 A법인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규정에 따라 갑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을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풋옵션계약에 따라 인수하고, 을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 2015.7.21.)

####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취득(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은 매매계약 체결시기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지만,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양도)시기의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대법원도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익금산입액 산정 시 시가 판정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판례** 대법원 2007두14978, 2010.5.13.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각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시기의 구별은 고가매입의 경우의 세무회계 처리방법, 소득처분의 시기와 방법에 비추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도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의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인 반면,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함.

**2) 시가의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와 다른 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와 다른 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여부 등을 판정함에 있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대법원 95누5301, 1996.5.1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저가양도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양도자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례** 대법원 95누12408, 1996.1.23.

거래일 이후에 있는 매매가액을 공급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려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판례** 대법원 85누715, 1986.2.25.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어 시가를 고가매입 여부에 대한 판정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 5. 시가 산정 관련 주요 판례

### 1) [유사 매매사례가액]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 단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두51167, 2017.9.29.)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사실관계>

원고는 계열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서비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고시단가'\*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하였으나,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고시단가' 대비 할인된 단가를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함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기술자의 등급별 1일당 노임 단가를 참고로 하는 인건비 단가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비계열사에 지급한 인건비 단가를 시가로 보아 계열사에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판결내용>

원고가 비계열사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와 이 사건 계열사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유사한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각 계약 및 그에 따른 각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계열사와 비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계열사에 대해 고시단가를 적용한 것을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으며, 고시단가를 인건비 단가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2) [유사 매매사례가액] 유사 물류 운송 용역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2두12006, 2012.10.25.)

피고가 제시한 시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사실관계>

원고는 A/S 부품운송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들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물류회사 A를 직접 설립하여 3개월 동안은 종전의 사업자와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A업체의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지급 요청에 따라 수차례 협의를 통해 단가를 인상하였음

### <과세처분>

피고는 A가 특수관계에 있는 C자동차 주식회사와 D자동차 주식회사에 제공한 TP 운송용역(완성차를 공장에서 지역 출하장까지 운송하는 용역) 등을 이 사건 운송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판결내용>

해당 TP 운송용역은 특수관계에 있는 C와 D자동차 주식회사 등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된 용역이 아니고, 이 사건 용역과 TP 운송용역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화물의 종류, 운송방법, 운송거리 및 노선 등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차이가 있는 등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원고가 A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3) [유사 매매사례가액]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시가 산정 적법 여부(대법원 2017두38461, 2017.6.29.)

원고와 특수관계법인인 방문교육업체 A와의 거래형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F법인)의 경우와 다르므로 유사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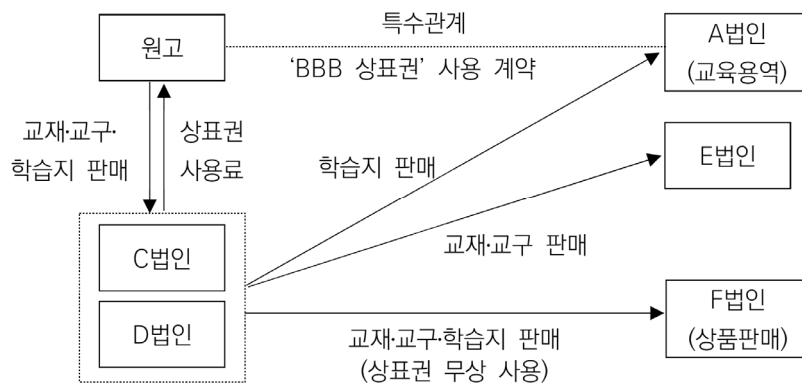
### <사실관계>

원고는 유아용 교재,교구 및 학습지 제작 업체이자 BBB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06~'08년까지

방문교육업체인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다가 '09년부터는 회계법인의 상표권 평가를 통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A법인 교육용역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았음

한편, 원고는 2006년 및 2007년에 비특수관계자인 C법인과 D법인에 유아용 교재·교구 및 학습지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의 3%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받았으며, C.D법인은 수도권 내 지역에는 A법인에 학습지를 E법인에 교재와 교구를 공급하였고, 수도권 외 지역에는 F법인에 교재·교구 및 학습지를 공급하였음

A법인은 원고와 직접 BBB 상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F법인은 C·D법인과 계약 을 통해 상표권을 무상사용 하였음



#### <과세처분>

피고는 교육용역 매출액의 6%를 BBB 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보아 원고가 '06~'08년까지 특수관계법인인 A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 <판결내용>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역사업자 F법인에게는 무상으로 상표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원고는 유아용 교재·교구 및 학습지를 제작하여 C.D법인에게 공급하고, C.D법인이 이를 지역사업자 F법인에게 공급하면서 F법인이 상품 판매의 용도로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는 A법인과는 직접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 등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어 원고와 F법인 사이의 거래형태는 원고와 A법인의 거래형태와 다르므로, F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 사용료가 원고와 A법인과 거래의 시가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등의 상표권 사용료 사례들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율이거나 원고의 상표권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나 특성이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또한, 원고는 2009년 이전에는 C법인과 D법인으로부터 소비자가의 3%(매출액의 8.7%)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받았고, 2007년경 A법인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후 회계법인에 적정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2009. 10. 1. A법인, D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매출액의 6%라는 사용료 기준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매출액의 6%라는 상표권 사용료는 원고가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료라고 봄이 상당함

#### 4) [유사 매매사례가액] 부품조립 용역의 시가 산정 적법 여부

(대법원2014두45291, 2015.3.12.)

특수관계가 없는 원청으로부터 하청받은 납품단가보다 높게 특수관계법인에게 재하청한 경우 원청으로부터 하청받은 납품단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사실관계>

원고는 휴대폰 부품을 사출 및 조립하여 A전자에 납품함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으로부터는 휴대폰 폴더의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고, A전자가 지정한 단가보다 20% 인상하여 B법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함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B법인에게 조립단가를 20% 증액하여 책정·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판결내용>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A전자와 체결한 휴대폰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2007년 1월~2008년 6월까지의 A전자의 지정단가에 의한 산출금액에서 총액기준 5%를 관리비로 차감하여 지급하다가 2008년 7월~2011년 12월까지 A전자의 지정단가에 20%를 가산하여 B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5) [유사 매매사례가액]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두16445, 2008.12.24.)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 또는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 <사실관계>

원고는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40,000주(@10,000원)를 배정받은 후 특수관계인 B와 C에게 각각 21,000주(@11,000원) 및 19,000주(@11,000)를 양도하였음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와 B.C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한 31,960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 <판결내용>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아주 일정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래의 가액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 또는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당시 원고의 연간 수입금액이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채무부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에라도 매도해야 할 만큼 경영이 악화되었다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쟁점주식 양도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6) [입증책임]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두3059, 2005.6.23.)

제3자 사이의 거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에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사실관계>

원고는 '94년 9월경 A방송사 발행 비상장주식 4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21억원(@5,000원)에 인수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99.9.20. 원고의 대표이사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23억원(@5,500원)에 양도함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7,500원에 거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 이하의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A방송사 발행 주식 거래내역

순번	거래일	거래주식수	1주당 가액	양도인	양수(인수)인
1	1994.9.3.	420,000	5,000	제3자	원고
2	1998.1.23.	30,600	9,000	제3자	김OO
3	1998.1.26.	6,000	5,000	제3자	이OO
4	1998.1.26.	14,000	5,000	제3자	황OO
5	1998.2.19.	20,000	9,000	제3자	김OO
6	1999.8.13.	30,000	7,500	제3자	제3자
7	1999.8.14.	90,000	7,500	제3자	제3자
8	1999.9.20.	420,000	5,500	원고	대표이사 B

#### <판결내용>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서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3두12493, 2004.10.27.)

A방송사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은 '95년부터 '99년 사이까지 1주당 5,000원에서 9,000원까지 그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며 거래되었고, 특히, '98.1.26. 이OO, 황OO이 두 차례에 걸쳐 6,000주, 14,000주를 각 1주당 5,000원에 매수한 반면, 김OO는 그 전.후인 '98.1.23. 및 '98.2.19.에 각 30,600주, 20,000주를 각 1주당 9,000원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등 같은 기간에도 가격의 등락이 매우 크며, '99년도에 원고와 B의 주식 거래 이전에 이루어진 2건 및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에 이루어진 1건 등의 거래사례만이 있을 뿐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1주당 7,500원에 거래된 '99.8.13.과 '99.8.14.의 2건의 거래사례의 가격은 그 거래가격의 결정경위에 관한 남OO의 증언만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의 시가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해야 함

## 7) [입증책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두12493, 2004.10.27.)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 <사실관계>

원고는 A전자 발행주식 7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5,000원씩 총 35억원에 취득함

'98.9.8. 원고 회사의 주식 81.51%를 소유하고 있던 정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약 2,795원씩 총 19억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인 16억원을 투자유가증권 처분 손실로 계상함

### <과세처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0원으로 보고, 원고가 출자자인 정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A전자 발행 주식 거래내역>

순번	거래일	거래주식수	1주당 가액	거래종류	양도인	양수(인수)인
1	1996.6.1.	700,000	5,000	유상증자		원고
2	1998.1.9.	10,000	5,000	양도	전OO*	정OO의 처
3	1998.1.9.	10,000	5,000	양도	김OO*	원고의 입원
4	1998.1.9.	10,000	5,000	양도	황OO*	정OO의 처
5	1998.9.8.	700,000	2,795	양도	원고	정OO
6	1998.10.8.	700,000	5,000	양도	원고 계열사	정OO

\* 전OO, 김OO, 황OO는 원고의 설립 발기인이자 전직 임원

### <판결내용>

거래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양도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대법원 99두2505, 2000.2.11.)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의 실례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첫째, 원고의 전 임원인 전OO, 김OO, 황OO이 98.1.9.

그 소유 명의의 주식을 정OO의 처와 원고의 임원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 대주주인 정OO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

면서 이를 정OO의 처와 원고의 임원의 명의로 넘겨준 것에 불과하여 그 거래가액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주식의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원고의 임원 또는 대주주인 정OO의 처라는 특수한 친분관계에 있고, 또 전OO, 김OO, 황OO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같은 날 한꺼번에 액면가액대로 주식이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원고 계열사가 '98.10.8. 정OO에게 그 소유 주식 7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은 회사와 대주주라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 계열사의 대주주인 정OO은 거래 주식의 평가액이 2,51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득이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점은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아울러, 정OO가 미국 회사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어느 것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 IV. 경제적 합리성

### 1. 개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조세부담의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경제적 합리성은 상거래 관행·경영 판단·정부정책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음

"경제적 합리성"이란 해당 거래가 진정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 행위가 진정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에서 벗어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감소가 초래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례** 대법원 2009두12822, 2010.1.14.

회사가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동일 계열사가 발행한 실권주를 고가인수한 경우, 그 출자전환은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그 계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 2.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

### 1)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가. 후순위 차입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6두40375, 2018.7.26.)

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권리가 불리하므로 후순위 차입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할 수 없음

#### <사실관계>

원고는 '06년에 준공된 00고속도로에 대해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로부터 후순위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의 일부는 연 12%,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선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6.7%임)

#### <과세처분>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지급한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판결내용>

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점,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자되는 반면 투자이익의 회수기간은 매우 장기간이므로 사업시행자(대주주)가 투자비용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부담하게 됨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의 원금상환은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매



우 높으므로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높은 이자율이라 할 수 없음

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간접 지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3두20127, 2014.4.10.)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B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및 호텔을 시행사인 C법인과 E법인으로부터 각각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C법인과 E법인은 해당 대금 전액을 B건설에 대한 단기차입금, 공사미수금 등의 변제에 사용함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건설에 부당하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에 대한 분양대금 중 기지급 매매대금 0000원에 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라 그에 관한 인정자금을 익금에 산입함

<판결내용>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 수익 파생에 공헌하거나 장래에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등 수익과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매입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교환사채를 인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0두19294, 2012.11.29.)

교환사채는 주식교환청구권 등이 부여되어 있어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낮은 이자율의 교환사채 인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 <사실관계>

XX그룹의 창업자인 김AA이 사망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행하자, 그 상속인들은 '01년 5월경 이사회 등을 거쳐 XX그룹을 분리하여 그 중 XX산업 주식회사(이하 "XX산업") 계열은 장남인 김BB가, OO주식회사 계열은 차남인 김OO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계열은 삼남인 김CC가 각각 경영권을 갖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음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01년 6월 XX산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인 원고의 주식 180만주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액면가액 000원, 이자율 연 8%, 교환가액 1주당 000원, 만기일이 '04년 6월인 교환사채\*(이하 "이 사건 교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이를 전부 인수하였음

\* 사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그 후 원고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교환사채를 원고의 실질 사주인 김CC가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YY 등에 대부분을 매각하였음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수자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부당하게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함

### <판결내용>

원심은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대금은 원고가 자산운용의 목적이 아니라 실질사주인 김CC로 하여금 원고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XX산업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그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XX산업이 발행한 이 사건 교환사채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2001년 11%, 2002년 이후에는 9%)보다 낮은 연 8%의 이자율로 인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자금의 저율대여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교환사채는 그 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그 가치만큼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사실, ② 이 사건 교환사채의 발행 당시 XX산업과 동일한 신용평가등급(A)의 기업이 발행한 사채에 대한 채권가격평가기관의 공시수익률은 7.73%로서, 이 사건 교환사채의 이자율 8%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교환사채의 이자율 8%는 XX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이해가 상반된 원고의 실질 사주인 김CC 측과 XX산업의 실질 사주인 김BB 측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 사실, ④ 교환청구권의 가치는 교환사채의 매각이나 교환청

구권의 행사과정 등을 통하여 현실화되는데, 원고도 실제로 이 사건 교환사채 중 77만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취득금액인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에 YY 등에 매각하는 등 이 사건 교환사채의 매각 과정에서 교환청구권의 가치를 일부 실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 사건 교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자금의 저율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라. 특수관계인에 비해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낮추어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08두21003, 2009.1.30.)

토지 위치·형상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 비해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낮추어 배분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과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A법인에게 일괄 양도함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A법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인에 비해 낮추어 배분한 것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판결내용>

토지를 일괄 매수하는 A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지상에 건물이 없는 특수관계인들의 토지들에 비하여 상당한 건물 철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고 토지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최초 협상과정에서부터 위와 같은 점을 부각시켜 매도인들에게 매매가격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매도인인 원고 등도 이를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받아들였으며, 토지는 용도와 지목, 도로와의 접근조건과 연접비율, 위치, 형상, 면적, 주변환경 등에 따라 그 시세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원고 소유의 토지는 특수관계인들의 토지에 비하여 도로연접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적정한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넓고, 인근 상가와의 접근조건이나 일조권 등 주변환경에서 열세에 있는바, 이러한 여러사정이 토지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을 다른 토지들의 매매대금보다 낮추어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99두10131, 2001.11.27.)

출자금 납입에 갈음하여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영업권 양도 대가를 면한 이익을 원고의 출자자에게 분여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관계>

원고는 (주)AA와 51% 대 49%의 비율로 출자하여 (주)BB를 설립하고 전기통신사업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주)BB에 양도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

#### <과세처분>

피고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고도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판결내용>

원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위 영업권을 (주)BB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AA의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납입에 상응하여, 원고의 출자지분 51%에 상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 2,081,632,653원의 납입에 갈음하여 위 영업권을 (주)BB에 양도함으로써 위 합작투자계약상의 출자비율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임

위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영업권을 (주)BB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주식발행초과금 2,081,632,653원의 납입을 면한 이익을 원고의 출자자 등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2)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가. 선금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1두56992, 2022.2.24.)

특수관계인에게 선금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사실관계>

원고는 HHH호를 신조하고, 중고선인 III호를 구입하여 운항하고자 하였으나 금융대출한도의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인 GG해운이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HHH호 및 III호(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함

원고는 GG해운과 이 사건 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독점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G해운은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용선료를 수령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매출이 없음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G해운에게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는 외에 수시로 선급금(선급용선료)을 지급함

한편, GG해운은 2017년 5월경 III호를, 2017년 10월경 HHH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GG해운에게 지급할 선박매매대금, 용선료 등을 GG해운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하였음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GG해운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일별 평균 잔액을 86억원으로 산정(이하 "이 사건 선급금")한 다음, 이 사건 선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으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함

#### <판결내용>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GG해운은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용선료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선박의 리스료, 선박 수선을 위한 경비 등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GG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보유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G해운에게 매월 용선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수시로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음

원고가 GG해운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GG해운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GG해운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한 것은 적법함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8두56459, 2020.3.26.)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주)AAA에게 신기술 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사용·수정·개선할 수 있는 기술응용권을 허락하고, (주)AAA는 12년 동안 원고에게 매년 미화 3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와 매년 각 분기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런닝로열티 등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사용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하였으나, 계약 체결내용과 달리 (주)AAA는 계약 체결 후 1년 뒤부터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 <과세처분>

원고가 (주)AAA로부터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를 회수하지 않은 것을 채권의 포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판결내용>

(주)AAA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신기술 공정을 적용하여 2013년 1월경까지 발포제를 계속 생산하였고, 신기술 공정이 (주)AAA의 발포제 생산량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 ~ 2012 사업연도에 구기술 공정의 수 배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계약 체결 후 1년 뒤부터 계약에서 정한 기술사용료를 한 번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주)AAA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았으며, 기술사용료 회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함

이러한 원고의 채권 포기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두39573, 2018.10.25.)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차입금 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lt;사실관계&gt;

원고는 (주)BB건설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A공제회는 (주)BB건설로부터 원고의 주식 100%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함

원고는 민자유치 시설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AA공제회로부터 대출한도액 500억원을 이자율 연 13.06%,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금전을 차용함(이하 "이 사건 차입")

## &lt;과세처분&gt;

피고는 이 사건 차입에 대해 원고가 특수관계가 있는 AA공제회로부터 금전을 시가(당좌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lt;판결내용&gt;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원고의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중 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이 사건 차입을 조기 상환하거나, 이를 근거로 AA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시중금리가 계속하여 하락추세였음에도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차입 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라. 정기예금 예치 후 담보제공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2006두19037, 2009.4.23.)

높은 대출이자율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이를 특수관계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lt;사실관계&gt;

원고는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특수관계법인들은 동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 &lt;과세처분&gt;

피고는 원고가 정기예금을 특수관계법인들의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원고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에금에 가입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지급이자와 수입이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담보로 제공된 정기에금은 특수관계법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특수관계법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정기에금 예탁금을 모두 상실하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행위는 적법함

### 3. 경영판단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

#### 1)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0두31842, 2020.4.29.)

SPC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원고는 SPC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율 0%로 대여함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실제 대여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의 일반운영자금은 통상적인 이율로 대여한 반면 문제가 된 금원을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것은 원고가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운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와 출자를 한 경우를 비교할 때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는 점,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위 및 목적, 금원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9두12822, 2010.1.14.)

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신주를 인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AA건설의 주주로서, (주)AA건설에 대하여 3,50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주)AA건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기타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재배정 받았음

이후 (주)AA건설이 파산선고를 받고 발행주식을 무상 소각하자 원고는 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던 위 주식 3,500억원을 손금에 산입함

<과세처분>

피고는 (주)AA건설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주식을 원고가 5,000원에 인수함으로써 (주)AA건설의 기존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B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가 (주)AA건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주)AA건설이 파산할 경우 거액의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하여 원고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주)AA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신주 인수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저가의 신주를 추가 인수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

상인지 여부(대법원 96누9966, 1997.2.14.)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과중한 부채의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한 원고의 합리적인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의 자회사가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원고는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A가 신주를 추가 인수함

<과세처분>

피고는 신주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의 2배 정도인 신주 인수를 포기한 것은 원고가 A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신주배정 당시 원고는 냉동공장을 신축하여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원고는 자회사의 유상증자 무렵 총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신주인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원고로서는 각 증자 당시 원고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으로 그 자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어 당시 자본금에 비하여 과중한 부채의 부담을 안고 신주를 인수할 수 없었음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과중한 부채의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한 원고의 합리적인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임

라.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89누8095, 1990.5.11.)

거래처 경영상태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지류 제조업자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A법인에게 납품한 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매출처에 비해 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하였음

<과세처분>

피고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부당하게 지연되었으므로, 지연일에 상당하는 소정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원고가 생산하는 담배필터 제조용 원재료인 필터원지 전량은 A법인만이 구입하므로 유일한 수요자인 A법인의 경제적 사정을 원고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독점 생산품인 특종지와 씨씨피지는 주로 기타 거래처가 구입함으로써 기타 거래처가 오히려 원고의 요구와 사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A법인의 경영이 악화된 특정 연도에 외상매출금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후 A법인의 영업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외상매출금 잔액이 현격히 감소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A법인이 원고의 대량 거래처일뿐더러 생산제품인 필터원지의 유일한 수요자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원고로서는 A법인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출대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수지연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2)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가. 상장주식 장외 거래금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4두1772, 2014.7.10.)

상장주식 장외 거래금액이 시가와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도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함

###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 등에게 자신이 소유한 C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였으며, B법인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가액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 금액을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원고는 해당 주식매입이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

### <과세처분>

피고는 B법인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

### <판결내용>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주식은 장외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나, 1주당 매매가액이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약 3.45배에 이르고 법인세 신고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로 00회사와 합병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기한 것이며, C법인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여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는 그 가격 결정의 측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음

## 나. 계열사교육원에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5두10767, 2007.11.29.)

원고는 계열사교육원에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사정 등을 감안시 자금지원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사실관계>

A법인은 연구소를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동 연구소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연수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계열회사 중역회의에서 각 계열사별 4급 이상 직원 수를 기준으로 각 계열회사별 임차보증금을 정하여 A법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A법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을 지급함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의 임차보증금을 연수원 신축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율 계산을 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율 손금불산입함

### <판결내용>

원심은 원고가 A법인에게 연수원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원고의 연수원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고려되지 아니한 통상의 연수 교육비용을 지급한 점, 연수원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시점인 연수원 완공 이전에 미리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임차보증금 지급행위에 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바, 이 사건 관련 원심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 다. 계열사를 위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6두125, 2006.11.10.)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사실관계>

원고는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A건설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 채 11회에 걸쳐 원고회사의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

원고는 '98년 10월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승인되었으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액의 50%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50%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합계 531억여 원을 대위변제 하였음

A건설에 대하여 진행된 회사정리절차에서 A건설에 대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구상채권은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A건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 대위변제금은 모두 원고의 손실로 처리됨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와 A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위변제에 의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포기로 인한 손실은 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판결내용>

원고의 업무내용 내지 사업목적, 원고가 이 사건 채무보증이나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될 이익과 이 사건 구상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실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 중 50% 상당을 이행하는 대신 그 나머지 50% 상당의 보증채무를 채권단으로부터 면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A건설에 대한 이 사건 채무보증과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임

또한, 비록 이 사건 구상채권이 정리법원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상채권 소멸 이전에 이미 원고가 자신의 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보증을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A건설에 제공함으로써,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른 정상적 기업운영에 기초한 기업회계 상의 손금산입 근거를 스스로 상실한 이상, 그 이후 전개된 회사정리절차의 일반적 실무운영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구상채권의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회복될 수 없음

기업의 금융확보를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사이에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고 또한 그것이 당시 경제계의 일반적 현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자본총액 대비 보증채무액 비율이나 채무보증당시 A건설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당시 관행에 순응한 상황적 불가피성이 이 사건 채무보증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9호에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한 '무수익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라. 특수관계인이 차입금 변제시 원금부터 우선 변제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92누114, 1992.10.13.)

차입금 변제시 원금에 우선 총당하는 행위는 미수이자에 먼저 총당할 경우 잔존할 원금 해당 부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채무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특수관계법인 (주)A에게 대여하였으며, (주)A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 시 원금부터 우선 변제하도록 약정함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주)A로부터 대여금 회수시 원금을 우선 회수할 경우 남아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만큼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변제금원을 원금에 먼저 총당하여 왔다면 이는 변제금원을 미수이자에 먼저 총당할 경우에 잔존할 원금 해당 부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만큼 (주)A에 이익을 주는 반면 원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게 됨이 명백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그와 같은 손실을 입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민법상 변제충당 방법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또는 (주)A의 변제충당 약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A가 원래 국영 기업체이던 원고를 부득이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지게 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님

## 4. 정부정책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

### 1)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지방공사에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두63887, 2018.3.15.)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제3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별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인 AA공사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시에 150억원을 지정기탁금으로 지급한 후, 지정기탁금 전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함

\*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AA공사에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지정기탁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판결내용>

##### ▶ 1심 판결 요지(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820, 2017.2.10.)

직접 자금 출연행위를 하지 않고 기부의 형식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는 행위는 조세회피 효과를 작출한 것으로서 용인할 수 없으며, 행위의 목적과 실질이 우회적인 자금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사업상 공익목적이 있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 2심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2017누300, 2017.9.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과의 직접적인 거래 이외에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조항인 실질과세 원칙 적용 이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에 있어서 거래 행위는 쌍방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금전의 제공과 같은 일방적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지원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이 경감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 3심 판결 요지(대법원2017두63887, 2018.3.15.)

원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AA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원고에게 AA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거절함

그러자 ○○시는 원고가 ○○시에 기부를 하고 ○○시가 AA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은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원고에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AA공사의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임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이러한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선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 2.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특수관계인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저가양도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8두42283, 2018.9.1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현물반환 협약 체결일(2012.8.27.)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중심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공기업으로 '92년 12월 일반상업지역의 쟁점 부동산을 A광역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았으나, A광역시는 예산부족 사태를 해소하고 시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12.8.27.에 원고로부터 5,625억원에 반환받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뒤 '13.1.30.에 제3자에게 9,000억원에 양도함

A광역시는 쟁점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주관해 오면서 그 매각대상의 범위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비용부담 정도를 분석하여 시운영 재원을 최대한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선택함

### <쟁점 부동산 현물출자·출자반환·양도 세부 진행과정>

일 자	내 용
1992.12월	쟁점 부동산 현물출자(A광역시 → 원고)
2012.5.21.	A광역시 쟁점 부동산 매각계획 확정
2012.5.23.	쟁점 부동산 반환 요청 공문 발송(A광역시 → 원고)
2012.5.31.	원고 쟁점 부동산 출자반환에 따른 유상감자계획 발표
2012.6.27.	A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발표(일반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2012.7.17.	원고 쟁점 부동산 감정평가 의뢰(평가기준일 2012.8.31.)
2012.7.26.	감정가액 5,625억원(일반상업지역으로 감정)
2012.8.27.	출자자금 현물반환 협약체결(원고 ↔ A광역시) 및 현물 반환
2012.9.3.	쟁점 부동산 용도 변경(일반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2012.9.7.	A광역시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의뢰(8,643억원, 8,720억원)
2013.1.30.	A광역시 제3자에게 쟁점 부동산 양도(양도가액 9,000억원)

### <과세처분>

피고는 쟁점 부동산의 시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5,625억원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으로



평가한 8,682억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판결내용>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원고와 A광역시 사이에 현물출자 자산반환 협약이 체결된 '12. 8. 27.경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682억원으로 판단하였으며, 원심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및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이미 변경된 쟁점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A광역시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앞서 본 법리와 기록과 같이 원고가 A광역시의 정책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물출자 자산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시가를 부적정하게 평가하여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는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2023년~2025년)

- 중소벤처기업부 -

## I. 추진배경

### □ 기본계획 개요

- (추진배경)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추진기반 마련
- (추진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중소기업 육성 기본방향, 제도 및 법령개선, R&D·판로·상생 등 정책 추진방향 포함
- (수립주기) 매 3년 (1차 : 2020~2022, 2차 : 2023~2025)
  - \* 제1차 중소기업 종합 육성계획(2020~2022) 수립·발표 ('20.10.06)
- (주요내용)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대책, 정책 등을 구체화하고 국민체감형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 ①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 등을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 ②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 ③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 □ 추진경과

-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 발굴 (윤석열정부 출범 후 944회)
  - \* 현장의견 수렴 : 장·차관 228회, 중소기업 임부즈만 62회, 지방중기청장 654회
-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토론회 (5.15)

- \* 정책자문단, 유관기관 및 협단체 임원사, 기업인 등 80여명
- 관계부처 의견조회 (5.23~5.30)
- \* 회람부처 : 63개 부처 (부처 18, 처·청 21, 위원회 7, 시·도 17)

## II. 그간 추진성과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수출·금융·벤처 등 역대급 성과창출은 물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비중 40%+ 달성
  - (역대 최대 수출) '22년도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 돌파
    - \*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20) 1,007 → ('21) 1,155 → ('22) 1,145
  - (해외진출 기반강화) 미국, 중동 등 정상외교를 계기로 역량있는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기반 강화
    -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설·확대, 설립비용 면제·감면, 규제완화, 투자유치 등
  - (복합위기 극복) 3고위기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23.1)
    - \*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증가 대응, 수출기업 자금공급 (22.8조원)
    - 혁신산업 육성 및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 (52.3조원)
    - 취약기업 채무부담 완화, 재기지원 및 신규자금 지원 (8.9조원)
  - (상생협력 기반조성) 원재료 가격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23.12, 국회통과)
    - － 상생결제, 상생협력기금 등 자발적 상생협력 실적 역대 최고
    - \* 상생결제 : ('20) 120조원 → ('21) 143조원 → ('22) 166조원
    - \*\*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 ('20) 2,572억원 → ('21) 3,681억원 → ('22) 4,365억원
- (창업·벤처) 세계로 나아가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창업열기 지속) 3고등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부동산업 제외시 전년대비 11,129개(1.0%) 증가하는 등 창업분위기 유지 추세
    - \* 창업기업(개, 부동산업 제외) : ('20) 1,046,814 → ('21) 1,100,589 → ('22) 1,111,718
  - －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온라인 쇼핑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 증가(+7.3%)
  - (벤처 생태계 고도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조성

- 복수의결권 도입('23.4, 국회통과),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및 벤처확인 제도 고도화 등 벤처 제도 혁신 추진
  - \* 민간주도 벤처 생태계 대책('22.11),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경쟁력 방안('23.4)
- (글로벌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22.9),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2.11) 등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지원 확대
  - \* 주요 지원방안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 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 10대 초격차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 지원 등
- (글로벌 경쟁력) 창업환경 개선(서울, '21. 16위 → '22. 10위), CES 혁신상 역대 최대, 벤처기업의 신규고용 등 성과창출
  - \* ('19) 7 → ('20) 30 → ('21) 23 → ('22) 71 → ('23) 111개사 (창업·벤처기업 기준)
  - \*\* '21 대비 '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증가율 : 벤처·창업기업이 일반기업 대비 3배 이상 : 유니콘기업(+22.9%) > 벤처·스타트업(+8.1%) > 전체(+2.4%)
- (소상공인)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소상공인 활력회복
  -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23조원 신속 지급 및 손실보상 강화
    - \* 대상확대(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정률(90→100%), 하한액(50→100만원) 상향 등
  - (소비축제) 코로나19 방역조치, 경기침체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동행축제 등 대규모 소비축제 추진
    - \* '7일간 동행축제'(9.1~7) 2,227억원 매출, 윈-윈터 페스티벌(12.16~25) 4,250억원 매출
  -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행하고, 카드형 상품권을 신규 도입('22.8)하는 등 전통시장 고객유입 촉진
    -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조원) : ('20) 4 → ('21) 3.15 → ('22) 3.5
  - (이태원 상권회복)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통해 유동인구 및 지역내 카드결제액 증가 등 상권회복이 점차 가시화
    - \* 작품 전시회, 소망불, 회식챌린지 등 민간 전문가들과 상권활성화 기획

### III. 정책여건 및 진단

#### 1. 최근 경기동향

##### ◆ (중소기업) 고금리 등 경기둔화에 따른 생산지수·수출 감소세

- (경기동향)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며 경기 선행, 동행지수가 기준치(100) 하회(통계청)

- \* 제조업 업황BSI 전망: ('22.12) 69 → ('23.1) 68 → (2) 65 → (3) 66
-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22.11) 99.5 → (12) 99.1 → ('23.1) 98.8 → (2) 98.5
-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22.11) 100.1 → (12) 99.4 → ('23.1) 99.0 → (2) 99.4
- (디지털 전환) 최근 생성AI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시장 가운데 국내 데이터·AI 등 디지털 벤처는 글로벌 시장 진입이 지연
  - \* 디지털 전환 조사결과(중앙회, '23.1월) :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는 40.7점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글로벌 디지털화 전략 부재 64.3%에 달하는 수준
- (수출)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5월 누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7.0% 감소한 461억달러
  - \* 역대 5월 누계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496 (2위) '23년 461 (3위) '21년 456
  - 23년 월별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 : (2월) △6.1 (3월) △12.9 (4월) △1.8 (5월) 1.4
  - '22.6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는 최근 감소폭을 축소하고, 5월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하는 등 다소 완화
  - \* 대·중견(△17.2%)보다 양호한 감소세, 수출 비중이 16.3% → 18.3%로 증가하고 조업일 수를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은 +1.4%로 9개월만에 플러스 전환

#### ◆ (창업·벤처) '22년말 기술창업·벤처투자 분위기 위축

- (기술창업) 원자재·인건비 등 제반비용 증가, '21년 역대 최고치 기저효과 등으로 기술기반 창업은 정체되는 추세
  - \* ('21.1~12) 24.0만개 → ('22.1~12) 22.9만개 → ('23.1~3) 6.2만개(전년동기 △0.2%)
- (벤처투자) 고금리 기조 지속,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벤처투자업계 전반에서 보수적인 투자집행이 유지
  - \* '23.1~5월 벤처투자액(조원) : ('19) 1.6 → ('20) 1.3 → ('21) 2.5 → ('22) 3.7 → ('23) 1.7 (동기대비 53.0% 감소)
- (펀드결성)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자들의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로 벤처펀드 결성은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 \* 펀드결성 증감율(전년 동기비, %) : ('22.3Q) +3.3 → (4Q) △13.0 → ('23.1Q) △78.6
- (유니콘 기업) 미국·인도 등 창업 선진국과 격차는 그대로 유지
  - \* 유니콘 기업수 변화('19.12→'22.12) : 미국 242 → 704개사(2.9배), 인도 24 → 85개사(3.5배), 독일 12 → 36개사(3.0배), 한국 10 → 22개사(2.2배)

#### ◆ (소상공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추세

- (매출·BSI) ) 유통종 카드매출액은 111.3 (2019=100)으로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감소, 체감 BSI는 소폭 하락(△0.7%)
  - \* 카드매출액 : ('23.3) 140.6 → (4) 111.3 / 소상공인 체감 BSI : ('23.2) 56.2 → (3) 69.9 → (4)

69.4

- (자영업자수) 고용원 有자영업자는 18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전체 자영업자도 19개월 연속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
  - \* 고용원 有 자영업자(천명) : ('19.5)1,584→('20.5)1,384→('21.5)1,317→('22.5)1,382→('23.5)1,435
  - 자영업자(천명) : ('19.5) 5,683 →('20.5) 5,601 →('21.5) 5,587 →('22.5) 5,697 →('23.5) 5,791
- (창·폐업) 제조업 창업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Delta$ 12.8%)하였으나, 숙박·음식점(21.0%), 개인서비스(6.5%) 등의 창업 증가
  - \* 창업기업 수(천개) : ('19.3) 110 → ('20.3) 111 → ('21.3) 129 → ('22.3) 124 → ('23.3) 118
- (동행축제) 5월 봄빛축제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약 63%)
  - \* ('22, 9월·12월) 평균 7,328억원 매출, ('23.5월) 5월 봄빛축제 1조 1,934억원 매출
  - \*\* 온·오프라인 6,220억원, 온누리상품권 1,8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액일 8,039억원을 달성하였으며, 동행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3,895억원이 판매

## 2. 정책 추진방향

###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 (수출) 온라인 수출 확대 및 디지털(콘텐츠·SW 등) 분야 신시장 개척과 강한 수출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 촉진
- (디지털) 디지털, 스마트화 등 미래 산업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등을 제고를 위한 전방위 지원
- (복합위기 극복)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 등 정책지원 강화

### ◆ (창업·벤처)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벤처 생태계의 개방성과 경쟁력을 강화
- (초격차·딥테크)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딥테크·신산업 기반 벤처·스타트업 집중적으로 육성
- (오픈 이노베이션) 벤처·스타트업의 개방적 마인드로 대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환경 조성

### ◆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유망 소상공인 선별 및 집중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민간주도 상권회복) 상권기획부터 상권활성화, 사후관리까지 상인·전문가가 주도하는 상권 활력 정책으로 전환
-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이 직면한 재난·경영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 중소,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추진전략 마련

## IV. 주요 추진과제

비 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초일류 국가 진입
-----	----------------------------

전 략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	-----------------------------

### 【 세부 추진과제 】

<b>【중소기업】</b>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 (글로벌) 중소기업 중심 수출 드라이브 촉진 •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 (함께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 (위기극복)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b>【창업·벤처】</b>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 (글로벌)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디지털) 미래선도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함께성장) 新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 (위기극복)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b>【소상공인】</b>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 (글로벌)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 (함께성장)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 (위기극복) 회복·재기 촉촉한 사회안전망 구축

### 〈 정책기반 조성 〉

-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
-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 정책원팀 구축

## 전략 1. [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 제조 디지털화 등 생산성·기술력 향상,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제값받기 환경 조성으로 '수출·일자리 성장 버팀목' 역할 강화

### 1 (글로벌) 중소기업 50+를 위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촉진

#### ① 디지털 분야 新수출시장 확대

- (디지털·서비스수출 중점 지원) 콘텐츠·기술수출 등 미래 디지털 분야 수출특화 박람회 개최('23~)
  - \* 중등 등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K-콘텐츠 엑스포', 스마트공장·시티 등 글로벌 전시회 참여 등
  -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수출 지원 쿼터제('23. 15%)를 도입하고 고비즈 코리아를 서비스수출 중개 플랫폼으로 기능 확장
  - \* 해외바이어 33만명, 국내 중소기업 제품 27만개가 등록된 B2B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히트상품(예: 동행축제 제품)을 DB화하여 중점 지원
- (플랫폼기반 온라인 수출) 유망상품의 온라인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패키지(입점·홍보·물류·배송, 최대 1억원) 제공('23~)
  - 국내 최초 항공수출 중소기업용 물류센터 구축('24년 착공 → '25년 운영) 및 물류바우처 지원 확대
  - \* 수출 물류 소과정을 원스톱 제공(제품 보관, 국내·외 운송, 통관 등), 기업당 물류비 약 10% 절감 지원(연간 총 600억원 절감효과)

#### ②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수출기업 육성

- (글로벌강소기업 1000+)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23~)
  - \* 유망(~100만달러) → 성장(100~500만) → 강소(500만~) → 강소+ (1,000만~)
  -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기본 지원, 시중은행(10개사)·정책금융(8개사) 금리·보증료 우대 제공
  - \* 특히, 강소단계 기업에게는 '수출바우처(1억원) + R&D(5억원) + 지자체 지원(1억원) + 정책금융(170억원) + 스마트공장(가점우대)'으로 강력하게 뒷받침
- (내수기업 세계로 1000+) 수출바우처의 지원대상의 3분의 1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배정('23~)
  - \* 수출마케팅·디자인·통번역 등 13개 서비스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23. 1,197억원)
  - 글로벌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튼튼한 내수기업에게 마케팅·금융 패키지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선정 우대
  - \* 간접수출 우수 중소기업, 소부장강소기업, 예비유니콘, TIPS, 초격차스타트업 등



- (간접수출기업 자금심 고취)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기여도와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격려하기 위해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지원

\* 직접수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정책 동일 대우, 장관 표창, 홍보 등에 집중 관리

### ③ 글로벌 해외거점 기반 확충 등 현지진출 활성화

- (해외거점 기반 확충) 기존 수출BI(12개국, 20개소)를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23~)

- \* ① (공간개편) 독립실 제공 → 네트워킹·협업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
- \* ② (기능강화) 보육 중심 → 금융·투자, 기술교류, 제품현지화 등 현지 특화사업 운영
- \* ③ (민관협업) 현지 네트워크 다변화 (국내외 기업인 및 한인 경제단체간 연결 거점)

\*\*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 유관기관의 기능과 차별화하고, 중소기업 특화기능 집중

- 중동·동남아시아 등의 해외진출 지원 및 촉진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지원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신규 개소

\* GBC : 사우디(리야드), UAE(두바이), / KSC : 베트남(하노이)

- (현지진출 활성화) 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 개최('23~)

- \* '23년 일정(안) : 태국 방콕(3월) →일본 도쿄(5월) →벨기에 브뤼셀(6월) →미국 LA(8월) →인니(9월)
- 'K-브랜드 엑스포' 등 대형박람회('23.6회 →'25. 10회 이상) 및 신시장(중동, 미주 등) 중심으로 수출전시회 참여 확대('23. 40회 → '25. 50회 이상)

- (수출금융) 수출 중소기업 대상 용자·보증 ('23. 17.8조원 규모)을 지속 공급하고 원자재 공동구매 보증 지원('23~)

\*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시 전용 보증('23. 600억원) 및 협동화 자금 ('23. 1,000억원)

### ④ 혁신 거점 기술교류 및 협력 R&D 확대

- (해외 기술교류) 중진공, 이노비즈협회, 기정원 등 기관별로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 활용 중소기업 기술교류 및 시장진출 지원('23~)

#### < 기관별 기술교류 상담회 계획(안) >

구분	아시아	유럽	중동·중남미
중진공	인도, 태국, 중국	독일, 폴란드신규, 불가리아신규	UAE(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콜롬비아신규
이노비즈 협회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필리핀, 캄보디아	독일, 아르메니아	-
기정원	우즈베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스위스신규	-

-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요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 로 기술교류단 파견

\* 상담회 참여기업 대상,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상시기술포류 지원

- (글로벌 진출 R&D) 해외 기술도입 후 후속 R&D와 국가간 협력 R&D 지원 확대, 혁신제품 고도화 R&D 신설 지원('23~)
  - (기술협상 지원) 해외 기술도입 및 후속 기술개발시, 발생 가능한 기술해석, 해외 금융거래, 기술이전계약 등 애로사항 현장지원
    - \* 기술도입 및 사업화 수행기관의 안정적 국제협력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금융·물류·항공 등 협력대상국 상시 모니터링 및 결과 공유
  -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국제협력 R&D 수행기업에 제품 수요처 발굴, 현지 시장진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과확산 촉진
    - \*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 협업 추진
  - (혁신제품 고도화) 해외시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 진단·기획 및 고도화 R&D 신설
    - \* 해외진출 목표 시장의 특성·요구사항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시장분석기관을 활용하여 제품 진단·기획 지원

## 2.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 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촉진

-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개편) 정부주도 양적확대 전략에서 탈피, 기업역량 맞춤 지원,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민간중심 기반 강화로 개편('24~)

#### <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개편 방향>

◆ 추진 방식	■ 물량중심 스마트공장 보급 ⇨ 기업역량별 맞춤 지원
◆ 추진 목표	■ 솔루션 구축 ⇨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 거버넌스	■ 정부주도 지원 ⇨ 지방+민관 DX 환경 조성

- (기업역량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의 DX수준과 밸류체인을 고려한 글로벌 선도모델 육성전략으로 전면 개편('24~)
  - (선도기업) Digital Twin·AI 기반으로 자율제조, 예지보전, 품질보증 등이 가능한 등대공장 수준의 중소기업형 선도모델 집중 육성
    - (추진전략)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산업·업종별 대표기업 중 준비된 기업 대상으로 추진 및 금융·판로·R&D 등 정책연계
    - (확산방안) 구축사례를 DX포털에 등록하여 이중·동종업계확산, 우수 AI 솔루션은 Cloud 기반 서비스형 SW(SaaS) 개발, 글로벌 등대공장(WEF) 등재 지원

- (협력기업) 개별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가치사슬 단위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최적화
  - (추진전략) 이차전지·반도체·원자력 등 수출·주력업종 및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디지털 전환 추진
  - (확산방안)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제품생산 + 제품기획·개발, 물류·유통, AS 등 후속 고도화 사업 추진
- (뿌리기업) 제조업의 첨단·자동화를 위한 로봇·자동화 보급 확산
  - (추진전략) 지방소재 뿌리기업 및 고성장 기업을 타겟팅, 국산부품과 연계·지원, 적정기술 기반 디지털 리트로핏 신설·지원
  - (확산방안) 표준공정 모델 활용·확산을 통해 제조SW산업 활성화(산업부 협업), 로봇·자동화 전문교육센터(TP) 운영·연계

## ②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 (표준화)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확립·확산('24~)
  - (표준확립) 글로벌 제조데이터 표준(AAS\* 등)을 한국형 표준\*\*으로 개발, 설비·운영 데이터 표준화로 공장간 상호운용성 확보
    -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 장비·설비 및 운용정보의 데이터화 표준체계
    - \*\* 제조업종 중 표준화 대상 장비·공정분야 선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 (실증·확산) 업종·장비별 표준 참조모델 및 가이드 개발·실증
- (연결화)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 구축
  - (디지털제조 플랫폼) 데이터전환 허브(Hub) 운영과 함께 제조메타데이터 저장·공유 리포지토리(Repository) 등 디지털제조 플랫폼\*\* 구축
    - \* DPP, CBAM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데이터 공유·활성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 (활성화) 온보딩(Onboarding) 컨설팅 및 교육, 표준인증, 데이터 연계(연결툴, 운영SW 등) 개발, 국제협력(Catena-X 등) 추진
- (시장화) 제조데이터 거래 기반 조성 및 시장 형성 지원('23~)
  - (생산·거래 지원) 신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 데이터 가공·구매 지원을 시범운영 하여 데이터 품질확보 및 초기시장 형성 유도
    - \* 제조데이터 가공지원('23, 12.5억원, 25개), 데이터 거래지원('23, 5억원, 50개)
  - (거래 기반) 제조데이터 등록과 검색·구매 가능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형태 거래소 개소 및 품질검증·가격책정 가이드 라인 제공

## ③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디지털전환 촉진

- (솔루션 구축)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 지원('23~)

구분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신규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등을 희망하는 기업	최대 6천만원(총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개선)	▪ 우리부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솔루션을 구축한 기업 중 우수성과 창출 기업	최대 1억원(총사업비의 50% 이내)

- \* (지원규모) ('23~'24) 신규 150개사, 고도화 15개사 ('25) 신규 400개사, 고도화 40개사  
 - 중소기업의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분야	세부 분야 (예시)
온라인경제	① 신선식품 구매·배송, ② 원격헬스·의료 서비스 제공, ③ 교육, ④ 종합서비스
공공문제	⑤ 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 업종공동 플랫폼(협업 솔루션)
기업혁신	⑦ 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 물류관리(WMS), ⑨ 고객관리(CRM), ⑩ 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 챗봇(대화형 메신저), ⑫ 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 (서비스업 전용 R&D) 디지털 산업 등 중소기업의 미래 新시장 선점을 위한 서비스 유망 분야 발굴 및 전용 R&D 추진('23~)
  - 중소기업 유망 서비스 분야 발굴 및 중·장기적 기술 로드맵 수립을 통한 전략적 지원 기반 마련
- \* 정부 정책 방향과 서비스 트렌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분석하여 효과성, 수월성 높은 중소기업 적합 서비스 분야 선정
- 중소 서비스기업 전용 R&D 신설 및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R&D 제도혁신\* 병행
- \* 제도혁신(예시) : 정성적 목표 설정 인정, 평가위원회 VC·인문·사회분야 전문가 참여, 성공 여부 판정시 수요자 참여 등

#### ④ 민간주도, 성과창출형 R&D 지원강화

- (투자방식 확대) 시장친화적인 '先민간투자 → 後정부지원' 방식 R&D를 대폭 확대하고, 덤테크 중소벤처 육성 뒷받침('23~)
  - \* 지원예산 ('23, 억원) : 스케일업팁스 612, 공동투자형 517, 팁스 2,681억원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VC·연구개발전문회사 등의 컨소시엄)에게 장기사업권을 부여(3년)하여 우수기업 상시발굴 및 전문성 축적 유도
- (고위험·고성과 R&D) 우수 중소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주도 프로젝트 추진('23~)
  - 프로젝트를 민간에서 발굴하고, 정부는 지분투자·출연R&D 대규모 매칭 지원하여 파괴적

## 혁신성과 창출

-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콜업션 비율 및 우선순실충당을 확대하고, 성실 수행 인정범위 확대 등 실패부담 경감

## ⑤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 (R&D) ①자생력 제고, ②국산화, ③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 R&D 종합전략\*(산업부)' 및 '중소기업 특화 R&D 로드맵(중기부)\*\*' 수립('23~)
  - \*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분야)을 중심으로 5년간 2조원 규모(민·관) 투자방향 제시
  - \*\* 원전 기자재 40개 품목 및 180개 핵심 기술별 시장 진입을 위한 개발일정 제시
- (투·융자) 정책자금 및 보증 1.2조원\*\*, 중기부 민간펀드\* 250억원 등 금융지원을 통해 원전 중소기업 분야 전략적 투입('23~)
  - \* 산업부 융자 0.5조원 및 중기부 융자·보증 등 0.3조원('23~'28), 시중은행 0.4조원('23~)
  - \*\* 시중은행을 통해 '(가칭) 원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 조성('24)

## ⑥ 디지털 등 미래형 인재 육성

- (미래인재 양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개편('23~)
  -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사업 주관대학 선정시 반도체 등 미래유망 학과를 선정하고 핵심인재 양성 주력
    - \* (계약학과)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을 지원하고 등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
    - \*\* (기술사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 연계교육(학과에 3.2억원 지원)
- (특성화고 개편) 198곳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학교·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는 현장인력 양성('23~)
  - 스마트공장 거점학교를 지정·운영(17개교)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항공드론 등 신기술 중점지원 학교도 확대 운영(7개교 내외)
    - \* 전문 자문기관을 활용하여 특성화고가 필요로 하는 공통교재 개발·보급, 특화교육 과정운영 등의 교육 컨설팅도 지원
- (연구전문 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이공계 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지원('23~)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 기업 선정우대 등 중소기업의 미래산업 대응력 제고
    - \* 첨단산업 범위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AI, 지능형 로봇 등 13개 분야
- (장기재직 유도)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으로 장기재직 및 인력유입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설('23~)

- \* 적립금 : 청년·기업·정부 각 600만원(3년, 총 1,800만원)
-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기업일자리평가 참여, 성과공유제 개선등을 통해 복지환경을 개선 촉진
- \* (기업일자리평가)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고용기여도를 평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경영성과 공유시 정부가 인센티브 부여

### 3. (함께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 ① 납품대금 연동제 기반마련 및 안착

- (연동제 현장 안착)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하위법령 마련, 제도기간 시행을 통해 연동제 조기안착 추진('23~)
  - 로드쇼 및 간담회 등으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가이드북 배포 등으로 신속히 해소
  - \* 협·단체, 지방중기청 주관으로 30회 이상 로드쇼를 연이어 개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면밀한 설명·홍보 추진
  -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용성 제고
  - \* 시행초기에는 제도기간('23.10.4~12.31일, 제도기간 중에는 직권조사 미실시)
- (연동제 확산) 우수 사례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장려하고, 탈법행위 등 불공정 행위는 신속히 적발하여 연동제 확산 유도('23~)
  -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교육 및 연동 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수한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직권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탈법행위, 보복행위 등 고의적·악의적인 위법행위를 조기에 근절

#### ② 자발적 동반성장 문화확산

- (新동반성장 모델 확산)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新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23~)
  - 선배기업이 미래세대 중소기업을 위해 교육, 상생, 협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도모
  - \* '함께성장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국민심사단 및 국민추천 등을 통해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하고, 그간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상생결제 확산)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등급제(5등급)를 운영하고 지역 및 유통분야의 상생결제 참여 유도('23~)
  - \* '20년 527.7조원 → '21년 670.5조원 → '22년 836.7조원(상생결제 누적 기준)
  - 민간 유통업체 및 지자체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방문 설명회,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상생결제 도입기업 발굴

-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개방형 상생협력기금 기획사업을 도입하여 출연기업의 기금사용 확대 및 지원대상의 다양성 제고('23~)
  - \*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 ('20) 2,572억원 → ('21) 3,681억원 → ('22) 4,365억원
  - 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평가가점 등 참여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 기금출연 활성화 도모
  - \* 평가대상 : (동반성장지수) 대·중견기업 215개사, (공공기관) 133개 기관
- (성과공유제 개편) 참여기업 규모, 성과공유금액, 혁신성 등 성과공유의 질 중심으로 평가기준 개편 및 제도 운영('23~)
  - \* 성과공유 고도화를 위하여 개방형 민간심의위원회를 도입 및 운영
  - 성과공유 아카데미 및 확산협의회를 운영하여 성과 공유과제 발굴 및 등록기업 확대를 통한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 업종별·유형별 우수사례 발굴하고, 과제발굴 가이드라인 및 교육용 콘텐츠 추가

### ③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

- (처리절차 공정화) 수·위탁 분쟁조정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조사절차 등에 관한 개념과 기준 등을 구체화('23~)
  - \*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개정 추진 :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조사 절차 방법 및 처리의 세부사항에 대한 체계 정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지방청 조사권한 반영 등
  - 상생법에서 규정한 의무·준수사항 위법성 판단기준 구체화 및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 추가 제시
  - \*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른 위탁기업의 금지사항 및 대표 위반사례 예시 등 추가
- (민간 자율조정체계 강화) 당사자간 자율협의를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개선('23~)
  - \* (중소기업 적합업종) 갈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상생방안을 도출하도록 제도 보완
  - \*\* (중소기업 사업조정) 자율조정 회의체에 전문가 배치, 합리적 대안 신속히 마련
  -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업종·품목별 특성에 맞는 상생프로그램 발굴·운영, 지속가능 상생협력 문화 조성
  - \*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대기업의 기술·마케팅 노하우 전수 및 협업·전략과제 발굴·추진
  - \* (현행)중소기업계 신청과제 평가·지원 → (개선)대·전문가 협업하여 과제 발굴·지원
- (중소 기술보호 지원정책 매칭) 부처별 산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매칭시키는 범부처 게이트웨이 구축('23~)
  -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조사 또는 분쟁조정에서 신청 등 온라인원스톱 지원
  -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22년 6개 → '25년 19개)을 통한 조정제도 연계를 통해 분쟁 장

## 기화 방지 및 조정 성립률 제고

### ④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진입 촉진

- (부품 국산화 기업 육성 추진) 경쟁제품 부품의 국산화 제품 선정 추진을 통해 조달시장 소외 부품생산기업 지원('23~)
  -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한 제품 중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3년 주기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총 631개)
  - 국산 부품으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입찰 우대를 통해, 국산화 부품생산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 촉진
- (신산업의 경쟁제품 지정 확대) 경쟁제품 추천시 혁신기업단체를 통한 추천을 활성화하여 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촉진('24~)
  - \*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기술혁신협회, 엑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 4. (위기대응)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 ① 고금리 등 복합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전망 강화

- (3高 대응 지원)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금융상품 공급('23~)
  - 고금리 대응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 최대 3%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신규 도입('23년 8,000억원, 중진공)
  - 지자체 협약보험 보험료 지원 한도 상향(70→90%) 및 벤처기업 보험인수 규모 확대(3,000억원 → 8,000억원) 등 매출채권보험 지원 강화
  - 매출채권 팩토링의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규모를 확대하여 매출채권 기반 유동성 공급 지원
    - \* 관련 법률 개정 시행: 기술보증기금법 '23.4월~, 중소기업진흥법 '23.6월~)
  - P-CBO 보증 신규공급을 추진(기보, '23년 2,000억원)하고, 회사채 만기를 확대(중진공, 3년 → 5년)하여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촉진
  -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조원 특례보증 신설('23, 지역신보)
    - \* 대상신용점수 710~839점, 한도최대 3천만원, 금리CD + 일시1.5%p / 분할1.8%p
- (취약기업 재기지원) 부실위험에 있거나 폐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용자·보증 지원('23~)
  - 중진공-은행 협업으로 부실 이전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선별 후 컨설팅·자금을 연계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프로그램 운영
  - 기보의 재기지원보증 대상을 확대해 재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실패한 기업도 지원하고, 성실변제자 보증료를 감면(0.2%p) 도입



-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의 융자사업을 신설('23)하고, 지역신보의 재창업 특례보증도 지속 지원
- (금융비용·상환부담 경감) 보증료율 인하·저금리 대환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채무조정 추진(~'25)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보증기관 신규보증의 보증료율 인하('23上, 0.2%p)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한도 등 확대(9.5조원, 금융위)
  - \* ① (기준) 최대 1억원 / 5년(2년 거치) / 코로나19 피해기업 한정  
(변경) 최대 2억원 / 10년(3년 거치) /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23.3월~)
  - ② 코로나19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23.下)
  -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최대 3년(~'25.9월), 상환유예 최대 1년(~'23.9월) 추가 지원
  - 정상 상황이 어려운 부실(위험)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조성, 최대 15억까지 채무조정 지원(~'25, 금융위)
  - \* '23.9월까지 신청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25.9월) 운영
-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편리하고 쉽게 정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시스템 고도화(~'24)
  -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수를 기존 선착순에서 희망기업 전수 접수방식으로 개선('23.4월~)하여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리성 제고
  - \* (기존) 온라인 상담예약(선착순) → 상담 → 신청 → 평가 → 용자결정  
(개편) 상담 신청(전수 접수) → 정책우선도평가 → 상담 → 신청 → 평가 → 용자결정
  - 소진공 센터 방문시 서류 없이 대출신청이 가능한 '디지털 창구'를 도입('23~)하고, 맞춤형 자금추천 등 고객중심 대출 서비스 구축
  - \* ('23.下) 대전·충남 2개 센터 시범운영 → (~'24) 전 센터 도입 확대
  - \*\* 맞춤형 자금 추천, 편의 서비스 확대 (본인인증, 알람방식), 메뉴체계 개편 등
  - 보증신청부터 최종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하는 지역신보 자체앱 구축·운영('23.4월), 비대면 보증상품 취급 금융회사 15개로 확대
  - \* 신규·기한연장 24시간 신청가능, 보증서류 제출, 전자약정, 보증상담예약, 증명서 발급 등

## ②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강화

- (탄소중립 지원 강화)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른 저탄소 공정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 지원
  - 탄소중립 분야 우수기업의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
  - \* 실시설계지원(컨설팅·공정분석·시장조사),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패키지 지원

- \*\* 참여기업 사업 효과성, 재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율 조정검토
- (글로벌의제 통합대응) 융자·R&D·컨설팅 등 종합지원을 통해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 관련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
  - \* 중소기업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 실시설계 상담 등의 컨설팅 및 자금 등
  -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협업 강화
- ③ 글로벌 기업규범에 대응
  - (중소기업 ESG 인프라 고도화) 국제환경 변화 및 ESG 경영에 대한 인식부족 중소기업을 위해 ESG 맞춤형 지원 강화
    - \* EU는 인권·환경 관련 기업 책임을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 합의안을 '22.2월에 발표하였고, '23.5월에 본회 표결 예정
    - \*\* 중소기업 ESG 인지도(중진공 조사) : 53.3%(21.6월) → 59.9%(22.6월) → 60.8%(22.12월)
    - ESG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해 업종·규모·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자가 진단(체크리스트) 및 최신 정보 제공
    - \* 체크리스트 1.0 오픈('22.1월) → 체크리스트 2.0('23.1월) → 환경변화에 맞게 매년 업데이트
  - (맞춤형 ESG지원) ESG 민관협의회운영으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컨설팅·자금 등 맞춤형 대응 지원
    - \* 중기부, 중진공, 중앙회, 대한상의, 동반위, 은행 등 29개 기관 참여(발족 '22.11월)
    - \*\* 심층진단·컨설팅, 탄소중립 전환·공정개선 R&D 자금, 온·오프라인 교육 등

## 전략 2. [ 창업·벤처 ]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인 벤처·스타트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대한민국을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 1. (글로벌화) 세계진출을 지향하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① 내수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육성아우터바운드
  - (해외거점 조성) 민간 협업형 「K-스타트업 센터」확대 및 벤처투자센터 구축, 재외공관을 활용한 스타트업 네트워크 강화('23~)
    - \* KSC(자금·네트워킹·사무공간 지원) 7→8개소(베트남) / 벤처투자센터 3→4개소(유럽)
    - \*\* 벤처·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개최,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홍보, 현지 정보 공유 등
  - (글로벌·대기업 협업) 구글 · 오라클 ·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 촉진('23~)

- \* ('22) 300억원(200개사) 지원 → ('23) 405억원(270개사) 지원
- (맞춤형 전략 수립) 미국, 중동 등 지역 특성 고려한 진출 추진('23~)
  - \* 미국 : (韓) 바이오 랩허브 - (美) 보스턴 랩 센트럴간 협약(22.4)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 중동 : 초격차 스타트업의 UAE 진출 지원, 사우디 BIBAN등 해외 전시회 참여 촉진 등
  - 일본 : 재외공관 기반 네트워킹 형성, 양국간 정책 교류, 한류 행사 연계 등
- 미주·유럽·아시아 등 권역별 해외전시회 참여를 통해 창업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기회 확대 지원
- \* VIVATECH 2023 (6월, 프랑스), SWITCH 2023 (10월, 싱가포르), CES 2024 (24.1월, 미국) 등
- ↳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한국 스타트업의 참여기회 및 홍보효과 극대화

## ②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인바운드

- (외국인 국내창업 촉진) 창업·취업비자 발급 등을 지원하여 해외 우수 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 지속 유도('23~, 법무부 협업)
  -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창업활동 종합 지원
- (글로벌 펀드 확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23년 8.6조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23~)
  - \*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로,투자기업 중 11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 현재 일부 지역에 집중된 조성지역도 중동·유럽 등으로 다변화

## 2. (디지털)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① 기술기반 디지털·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 (초격차프로젝트 본격 추진)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 민·관 공동 기술 사업화·R&D·글로벌 진출 등 2조원 규모 지원('23~)
  - \* (10대 신산업)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 핵심기술 보유한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기술사업화·스케일업, R&D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
- 심층평가, 기술성 배점확대 등 우수 스타트업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 \* 정부출연연 등 초격차 분야별 기술전문기관이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연구개발, 인력육성, 인프라 등 관련 정책들도 연계
- (TIPS 확대) 先 민간투자 → 後 정부지원 방식의 TIPS를 확대하고, 바이오·AI 등 딥테크 분야 별도 트랙(기간·규모↑) 신설('23~)
  - \* 연도별 운영규모 : ('22) 500개사 → ('23) 720개사 (44% 증가)
  -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당초) 2년·5억 → (확대) 3년·15억
- 기업 자금수요를 고려해 TIPS R&D 사업의 집행방식도 개선

- (창업생태계 디지털화)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 구축
  - \* K-startup과 Metavers(Meta+universe)의 합성어로서 스타트업의 가상공간이란 의미
  - 'K-스타버스'를 운영·관리하고, 기업에 맞춤형 창업지원을 제공하는 (가칭) 「디지털 중기청」을 가상공간에 설치·운영
- (디지털 창업 촉진)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인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창업으로 연계하고, 디지털 인재 공급을 위한 교육 확대('23~)
  - \* (현행) 인공지능 교육 + 스타트업 취업 연계 → (개선) 창업 연계 추가
  -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확대 : ('22) 1,600명 → ('23) 2,400명

## ②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23~)
  - 네거티브 규제 특례, 해외실증 지원\* 등 글로벌 수준의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투자·R&D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추진
  - \* (美) UL Solutions, (日) 다케다제약 등 글로벌 기관·클러스터와 협력사업 추진
  - \*\* 글로벌 혁신 특구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및 '23년내 2개 특구 지정
- (지역기반 창업인프라 강화) 인프라별 특성을 바탕으로 기능·역할을 체계화하고, 지자체·대학 등 유관기관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23~)
  -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추가 지정,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기반 혁신 창업의 허브역할 강화
  - \* ('22) 6개 (한양·강원·호서·부산·대구·전북) → ('23) 9개(신규 3개, 성균·한남·경상)
  -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창업사업화 참여기업 → (개선) 기존 + 지역 청년, 소상공인 등
- (지역 투자 활성화) 지자체·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25년 까지 6천억원 조성, 지역 혁신기업에 투자 확대(~'27)
  - 수도권-비수도권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 확대
  - \* ('21년) 충청권, 호남권 → ('23년) 동남권·대경권·강원권 中 1개 권역 추가 구축

## 3. (함께성장) 상생협력 기반 新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 ①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새로운 벤처기업을 응원

-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추진) 벤처기업, 플랫폼,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본격 가동('23~)
  - 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해온 이익·기술·재능 등을 he경제주체와 공

## 유하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혜택 제공

주체	프로그램 내용	주체	프로그램 내용
벤처기업	▪ 청년 일자리 창출, 후배기업 육성	중소기업	▪ 동시·다발적인 사회 공헌 활동
유니콘/플랫폼	▪ 소상공인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소상공인	▪ 보유 재능을 취약계층과 공유
벤처캐피탈	▪ 스타트업 심리압박 치유 심리케어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

- (사회적 창업가 육성) 혁신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동시 추구하는 소셜벤처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23~)
- \* 예비창업패키지 內 별도 트랙(100명), 전용 보증상품 운용(보증료 0.5% 감면, 100% 보증)

## ②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

- (협력 프로그램 확산) 기존 상생협력 프로그램(팍리스 챌린지 등)을 초격차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협력 방식도 고도화('23~)
- \* 중기부와 삼성전자 공동으로 유망 팍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파운드리 공정이용과 설계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22~)
- \*\* (기존) 반도체, 대·중소 협력 → (개선) 10대 초격차 분야, 대·중소 or 이업종 협력
- 다양한 업종간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시스템반도체		타 기술	협업 예시
시스템반도체 창업기업	←	바이오헬스	· 랩온어칩 반도체 기업과 DNA 치료제 등 신약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공동 실증
	←	미래모빌리티	· 라이다 센서 반도체 기업과 자율주행 SW기업 협업형 자율주행 통합 솔루션 개발
	←	친환경·에너지	· 전력센서 반도체 기업과 에너지 효율화 기업 간 협업을 통한 O&M 솔루션 개발
	←	로봇	· 배송 로봇 기업과 자율주행 SW 개발 기업 협업을 통한 문 앞 배송하는 물류 로봇 개발

-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는 플랫폼 신규 조성('23~)
- \* 협업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고, 정부는 실증·시제품 등을 지원
- (CVC 투자 활성화 지원) 국내 창업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한 해외법인에 대한 CVC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 마련('23~)
- \* (예시) 지배주주(주식의 50% 이상 소유)가 한국인인 해외법인
- \*\* (예시) (현행) 해외기업(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단체) 대상 투자는 20%까지만 허용
- (개선) 국내기업에 준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는 해외기업 투자에서 제외
-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 추진('23년~, 공정거래법 개정)

- \* 현재 외부출자 한도는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규정
- CVC와 투자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글로벌 CVC 컨퍼런스 국내 개최 (`23년 컴업 연계, `24년 유치)
- \* GCV(Global Corporate Venturing) : 매년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개최되며,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 정보, 네트워킹 기회 등 교류·협력

#### 4, (위기대응) 벤처·스타트업 위기 극복을 위한 스케일업

##### ① 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단계별 성장 지원 강화

- (초기 단계) 투자급감, 딥테크 분야 중심으로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시장 과소 영역인 엔젤·지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23)
  - \* 벤처·스타트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 신설(기보 0.55조원, 신보 0.6조원)
  - \*\* 기보 투자 : ('23 당초) 500억원 → (목표) 1,000억원, +500억원
  - 신보 투자 : ('23 당초) 565억원 → (목표) 675억원, +115억원
- (중기 단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 성장자금을 확대하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세컨더리펀드 1.5조원 이상 조성('23)
  - \* 세컨더리펀드의 신주투자 의무 폐지도 병행(「벤처투자법 시행령」개정)
- (후기 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가칭)'를 신규 조성하고, 해외정책금융기관과 공동 출자 펀드를 확대 조성('23)
  - \* 한국벤처투자가 Saudi Venture Capital의 기존 출자 펀드(\$150M)에 \$10M 출자에정

##### ②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 (은행의 투자 촉진) 벤처펀드(벤처조합, 신기조합)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現 0.5%)로 2배 확대(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23년)
  -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인 출자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3년)
- (투자회수 활성화) M&A·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 투자의무(現40% 이상)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 상장사 투자규제(現최대 20%) 완화('23~)
  -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분야 애로를 윈스톱으로 해결하는 종합 플랫폼 구축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개편, '23~)
  - \* Smart tech-Bridge :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플랫폼으로서 기술의 수요와 공급정보를 한데 모아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現 등록기술 86만건)

### ③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 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 (스톡옵션 확대)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가 유입되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벤처기업법 승개정, '23~)
  - \* (기존)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 → (추가) 관련 분야 경력, 학위 보유자
- (복수의결권 도입)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의결권 10주 한도 제한적 복수의결권주식 도입('23~)
  - \* '20년 제도 도입이 논의된 이후 일부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국회에서 계류되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여야합의로 본회의 통과('23.4.27)
    - 복수의결권 활용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제공 병행
- (「벤처기업법」상시화)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조항 폐지 (벤처기업법 개정, '23~)
- (벤처확인제도 개선)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
  - \* (기존) 매출액, 이익 → (추가) 활성이용자·고객전환율(플랫폼), 임상 단계(바이오) 등

## 전략 3.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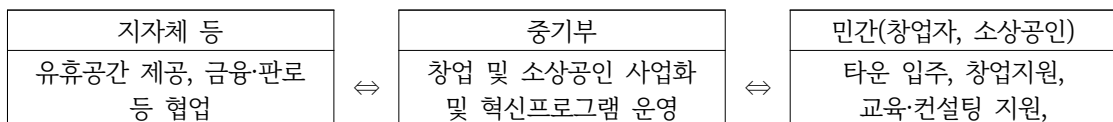
◇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브랜드·상권 육성하고 촘촘한 안전망 확충

### 1. (글로벌)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① 준비된 창업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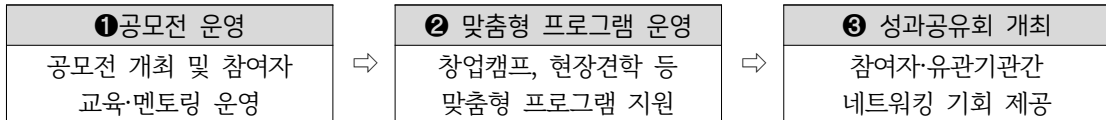
- (소상공인 창업거점) 지역 유흥자산(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창업·혁신 등을 지원할 소상공인 혁신허브 조성('23~, 지자체 등 협업)
  - \* 세종(조치원), 충남(아산시), 주문진 우체국 등 지역 유흥공간 등을 연계하여 구축
  - 청년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커뮤니티 형성 후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 운영

#### 〈 소상공인 혁신허브 추진체계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17개소)를 개편, 아이디어 발굴, 체험형 실습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예비창업자 年500명 육성

- 창업아이템 실현을 위한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보육공간 제공(최대 2년) 및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으로 사업화 촉진
- (로컬창업 활성화) 지역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생활산업 전공자를 로컬 예비창업자로 육성('23~)
  - \* 의무과정(복수·부전공)으로 도입하여 제조·서비스·리테일 등 생활산업에 지역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촉진
- 민간 교육기관 연계로 성공한 지역기업과 예비창업자간 교류 및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 선도모델을 지역으로 확산
- (청년창업자 특화지원) 직업계고 재학·졸업생 및 자립준비청년을 실전 창업으로 유도하는 청년창업 아이디어 도전트랙 운영('23~)
  - \* 공모전과 연계하여 발표스킬 코칭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캠프 및 현장 견학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역량 제고



② 유망 소상공인 선별 및 집중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혁신 사업모델을 창출·고도화하는 '강한 소상공인' 年105팀 육성,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 지원('23~)
  - \* 다차레의 피칭 과정을 거쳐 혁신기업가를 선발, BM 고도화 및 확장을 목표로 최대 1억원의 자금 지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추진체계 〉

구분	평가주체	추진내용
소상공인 창작자 등 선발	소진공 운영기관	■사업 참여자격 ■아이디어, 공간, 업종 등 적정성
상호학습 & 팀빌딩	운영기관	■소상공인, 창작자,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상호 BM 매칭 후 팀 구성
1차 피칭 및 BM고도화	전문평가단	■1차 선발 ■BM 고도화 자금 최대 6천만원 지급
2차 피칭 및 스케일업	전문평가단 국민평가단	■2차 선발 ■BM 확장(최대 4천만원)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기업화 및 가맹본부 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여 유망 프랜차이즈 年25개사 육성
- (경영역량 제고)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성과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23~)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운영하여 창업·마케팅·경영 등 분야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자체제작·민관 협업제작 강좌 등록

- \* 미래경영 등 소상공인 관심분야 E-Book을 무료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자도서관 운영
- 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아이디어 실현에 필요한 바우처를 종합제공하는 창의육성컨설팅 실시

### ③ 투·융자 자금지원 등을 통한 스케일업

- (소상공인 투자제도) 민간이 창의적 소상공인에 先투자하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매칭하는 융자제도 신설('23~, 400억원)
  - \* 투자기관이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先투자 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하여 後지원하는 '先투자-後융자제'
  - 크라우드 펀딩 필요비용을 지원하여 동네 주민들의 지역 소상공인 투자를 유도하는 동네 펀딩 모델 도입 검토
  - \* 크라우드 투자수익을 현물리워드(쿠폰 등)를 결합하여 배분함으로써 단골고객 확보 유도
  - 개인사업자 투자유치를 위해 매출·수익권 상호분배 후 법인전환시 지분전환 권리를 부여하는 (가칭)소상공인지분전환계약 도입 추진
- (소상공인 성장자금 지원) 사업성을 심사하여 성장 가속화에 필요한 운전자금(최대 1억원) 및 시설자금(최대 5억원) 지원
  - \* 성장기반자금 규모(억원) : ('21) 4,459 → ('22) 7,956 → ('23) 12,000

## 2.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 ① 소상공인 생업현장 內 스마트기술 도입

- (스마트상점 인식제고) 업종·단계별 도입 효용성이 높은 스마트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스마트상점 표준모델 인식 제고('23~)
  - \* 음식점업 단계별 도입 기술 예시 : 스마트오더(기초) → 키오스크(중점) → 서빙로봇(선도)

#### 〈 단계별 스마트기술 보급 로드맵(안) 〉

구분	1단계('23)	2단계('24~'25)	3단계('26~'27)
	스마트상점 인식제고	스마트상점 확산	스마트상점 고도화
주요 내용	기술도입의 편의성 등 인식제고 및 기술 보급	업종별 특화된 스마트기술 확산 및 계속 사용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 간 융합 및 연계 활용 지원
정부 역할	키오스크, 사이니지 등 HW 기반 기술 지원	업종별 특화 기술 발굴, HW+SW 연계기술 지원	스마트 상점 빅데이터 구축, 기술 간 융합서비스 지원

- 스마트 선도기업이 소상공인 발굴부터 기술보급 비용지원, 활용 노하우까지 종합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100개)
- \* (기존) 정부지원 70% + 소상공인 자부담 30%

- (상생형) 정부지원 50% + 소상공인 자부담 20% + 선도기업 30%
- (스마트기술 보급확대) 전국 소상공인·소공인에게 '25년까지 5만개 스마트상점·공방 보급('23~)
  - 소상공인 인건비 절감 및 운영효율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전문가를 매칭하여 수준진단 및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상점 보급 확대
  - \* 소공인 디지털 전환과 제조 혁신(생산성 향상 → 수익성 개선 → 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는 스마트공방 보급 확대
-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 밸류체인내 소공인들에게 공용 솔루션을 지원하는 소규모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 추진('23~)
  - 20개 내외 소공인을 팀으로 구성하여 생산·제조 관리, 공급망 관리시스템 및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
  - \* (사례, 독일) 의류제품 관련 업종기업(CAD/디자인, 재료, 인쇄, 절단, 조립 등)이 네트워크화 및 통합을 통해 빠른 섬유가공 및 유연한 생산체계 구축

## ②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하여 민간에게 AI기반 통합 상권정보 제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3~)
  - \* (국세청) 상가·부가세 매출, (행안부) 주거인구, (국토부) 부동산, (여신협회) 신용거래, (통신사) 유동인구,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 등
  - 소상공인 DB를 현행 약 200만개에서 65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영현황 및 상권 등을 실시간 분석
  - \*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개방된 상권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민간 주도로 신규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조성

## ③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 (맞춤형 정책지원) 지원사업 DB통합, 행정정보 연계 등을 통해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23~, 행안부 협업)
  - 업무 프로세스 및 DB를 단일 플랫폼으로 표준화하고, 수요자 편의기능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불편 최소화
  - \* 마이페이지, 관심사업 정보 자동알림, 지원사업 추천 기능, 진행사항 알림, 상담신청 및 처리현황 알림 등 편의 서비스 추가
  - 지원사업 프로세스\*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책 성과분석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할 데이터 기반 마련
  - \* 공고 - 접수 - 대상 선정 - 협약 - 정산 - 협업 - 사후관리 등
  - 행정정보와 연계하여 제출서류의 DB확보, 지원사업간 이력을 공유 등을 통해 既제출서류

재활용 및 서류간소화

### 3. (함께성장)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 ① 민간이 주도하는 상권회복 프로젝트

- (상권발전 기반구축) 상권정책 정립·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도약과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23~)
  - \* 주요내용(안) : ①지역상권 관리체계 고도화, ②민간 주도 상권 성장 생태계 조성, ③상권 공동체 상생 및 역할 강화, ④지역상권법 기반 상권활성화 제도 확립
  - 골목상권 공간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기획하여 상권 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 제도 신설
  - \* 상권발전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가칭)상권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新상권세움 프로젝트) 상권기획부터 상권활성화,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 추진('23~)
  - (Pre-상권 지원)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상권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도록 지원
  - (상권활성화) 소상공인·지자체 자율계획에 따른 테마공간 조성, 상품개발 및 판촉 등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지원
  - \* 상권활성화 우수지역 대상 상권도약 BM 발굴, 빈점포 매입프로그램 등 추진

#### ② 골목의 성장을 견인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23~)
  - \* ('23)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4곳) → 글로벌 대표상권으로 확대(1곳)
  - 로컬크리에이터 간 클러스터화를 통해 분산된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상권의 테마를 만들어내는 '골목형 로컬브랜드' 육성
  - \* (강릉 사례) 테라로사, 보헤미안 등 커피문화 확산 → 커피 재배, 커피거리 축제·스테이 등 연관산업 결합 → 커피가공 및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제조업 확장
- (지역 도시공간 재창조) 지역 고유자원 활용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특화재생 추진('23~, 국토부)
  -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여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공간 구축
  - \* (제주) 모슬개 도시락(4·3사건) (군산) 짬뽕스토리(수제맥주) (부산) 래추고(한복) 등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사업을 '부처 연계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선정 가점항목으로 편성

#### ③ 시대흐름에 맞춘 전통시장 변혁

- (민간영역 상생협력) 디지털 플랫폼, 물류망 등을 활용하는 대기업 및 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온라인 진출 지원 지속('23~)
  - \* (카카오) 온라인서비스, 카카오채널 활용교육 (KT) 무료 와이파이 도입, 노후 통신망 정리 등
  -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예방 및 상생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감독원, 민간은행 등과 협업으로 '장금이 프로젝트' 확대
  - \* '우리은행-광장시장' 장금이 1호협약 →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
- (전통시장 고유브랜드 개발)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부터 상표·디자인권 확보, 활용까지 종합 지원('23~, 특허청 협업)
  - \* (교육·상담) P 기초교육 진행 후 상인별基 사용 중인 상호 등록가능성 등 IP 상담
  - \*\* (개발) ①전통시장·상점가 보유 브랜드·디자인 현황 진단 → ②신규 브랜드·디자인개발 및 활용전략 수립 → ③상표·디자인 권리화
  - \*\*\* (활용) 전통시장 특색이 반영된 브랜드를 굿즈, 포장, 디자인 등에 적용 지원
- (디지털 역량강화) 전통시장 디지털화 교육을 시행할 민간 전담인력 풀을 구축하고, 상인 대상 SNS 활용 등 맞춤형 교육 실시('23~)
  - \* 전담인력 역할 : 디지털 맞춤형 상품개발, 입점, 마케팅, 온라인 시스템 운영 등
  - 냉동·냉장 설비를 보유한 공동배송센터를 신규 구축(연 50개소)하고, 배송 인프라(배송인력, 차량보험료, 유튜브 등) 유지 지원
  - \* 전통시장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등대 전통시장 2개소 구축

#### 4. (위기대응) 회복·폐업·재기 총총한 사회안전망 구축

##### ㉠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 (유동성 공급) 경기침체·재난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 공급('23~)
  - \*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속도를 가속화하여 신속하게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고, 예산소진시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추가지원 추진
  -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을 공급('23. 25조원, 중기부)하고, 신규보증 보증료율을 한시 인하( $\Delta 0.2\%$ p)
  - \* 지역신용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 지원('23~)하고,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1조원 금리우대 보증부대출 지원('23~)
  - 저신용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대상 8천억원('23) 규모 융자지원
- (금융비용 경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확대('23~'24)
  - 코로나19 피해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을 정상영위중인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2배 규모로 확대
  - \* (개인사업자) 5천만원 → 1억원, (법인 소기업) 1억원 → 2억원

- 대출만기 연장(5년→10년) 및 상환기간 확대(거치기간 2년→3년), 최초 3년간 보증료 인하(0.3%p)
- 대출 거치기간(2년 → 3년) 및 분할상환기간(3년 → 7년) 확장, 대환대출만기 10년(기존 5년)으로 연장, 보증료 인하(0.3p%) 등 추가지원
-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여파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속 시행('22.10~, 금융위)
  - \* '23.9월까지 신청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25.9월) 운영

## ②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복지강화

- (에너지 비용경감) 국제가격 변동성을 감안,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 및 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23~, 산업부)
  - \* 지원대상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확대)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
  - \*\* 시행시기 : (전기요금) '23.6~9월 (가스요금) '23. 12월~
- 소상공인 에너지고효율 설비 도입 및 소공인 역량·인식 제고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23~)하고, 에너지 저감 제품(설비) 대체 등 지원
  - \* (지원규모) 업체당 총 600만원 이내 (국비 70%(420만원)+자부담 30%(180만원))
- (자금지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및 정책자금 대출 지원('23, 중기부· 기재부· 국토부)
  - \* 세액공제율 : ('20년) 50% → ('21~'23년) 70%(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
- 코로나 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25%, 약 700억원) 및 납부기한 연장(3월 → 6월)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72억원)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23~)
- (복지혜택) 협동조합법령을 개정하여 복지· 후생사업 추진근거를 신설하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가입자 복지· 후생사업 확충('23~)
  - 영세 소상공인이 경영위험에서 벗어나 생계 안정성을 보장받게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지속 확대

## ③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촉제 개최

- (동행축제) 온·오프라인, 대·중소기업 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동행축제 연 3회 릴레이 개최('23~)
  - \* 가치소비를 강화한 상품 발굴, 개막식(전야제) 프로그램 등 특별행사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접점 확대
- 유통사, 지자체,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국·내외 민관행사와 브랜딩 연계를 통한 소비촉제 스케일업 추진

- \* (국내) 지역축제, 특산물 판매전 등 지자체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
  - \*\* (국외) KCON, 해외 현지마켓 등과 연계하여 우수기업 해외진출 지원
  - (코리아세일페스타) 전국 소비 분위기 조성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쇼핑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23~, 산업부)
- ④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도전 지원
- (재기지원) 경영위기부터 폐업지원, 재기까지 단계별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23~)
  - \* 경영개선 : ('22) 238억원 → ('23) 374억원, 점포철거비 : ('22) 평당 8만원 → ('23) 13만원
  - 경영교육·경영진단·개선자금 재기를 지원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 폐업 지원
  - \* 기업유형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등 전담멘토·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등 재취업·재창업 지원
  - (패스트트랙) 기관간 채무조정자 정보공유로 성실 채무조정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구축('23~)
  - 지원대상은 채무조정자 중 약정 후 6개월 이상 상환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자로 한정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전략 4. [ 정책기반 ] 과감한 규제혁파 및 정책원팀

- ◇ 공공기관·지방청, 조부처와 강력한 정책원팀을 결성하고, 현장 핵심규제 혁파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

### 1.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

- ① 전방위적 규제애로 발굴·개선체계 구축
- (핵심규제 발굴)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인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23~)
  - 해외규제·제도 및 규제혁신 사례 조사·분석, 기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나 홀로 규제' 발굴·개선
  - \* 특정국가 종합분석 방식이 아닌 주요 이슈, 개별규제별로 관련 선진사례 분석
  -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적정수익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 등 '골목경제 규제' 집중발굴·개선
  - \* 도로점용료, 시설면적규제, 환경규제 등 창업 및 경영 관련 규제 등
  - (핵심규제 해결) 핵심규제 발굴 후 로드쇼를 통한 현장으로 청취, 장관간 토론 및 범부처 회

의체를 통한 규제해결('23~)

- 테마별로 로드쇼를 개최하여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 논의
  - \* 경제규제혁신TF 및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범부처 회의체 안건 상정을 통한 규제 해결
- (규제예보제) 중소·소상공인이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 본격 운영('23~)
  - \* 주요 신설·강화 규제정보를 중소·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안내하여 현장 의견수렴
    - 중기부가 업계를 대변하여 과도한 규제 신설·강화 차단
-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신설·강화규제의 한시적 적용유예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도입도 추진('23~)

## ② 규제자유특구 성과 창출 촉진

- (규제자유특구 내실화) 규제자유특구 계획 내실화를 위한 '후보 특구제도' 도입('23.상), 전략적 특구 지정을 위한 '실증규제 맵' 마련('23~)
  - 특구계획 수립 시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특구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특구에 대한 컨설팅, 부처협의 등 계획 수립 지원
    - \* 규제여부 사전검토, 규제 신속확인, 기술평가위 검토·평가 등
  - 신산업 분야 실증규제, 시장규모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실증규제 맵' 마련,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분야로 확대하는 전략적 특구계획 수립
- (규제자유특구 개편)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증기간 확대·소관부처 법령정비 이행강화 등 특구제도 개편 추진('23~)
  - \* (주요 개편 내용) ①기초지자체 신청자격 확대, ②실증기간 확대(4년→6년), ③실증 안전성 입증 시 소관 부처의 개정계획 제출 의무화, ④특구 계획 변경절차 단축 등
- (규제 신속정비) 특례적용 규제가 전국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사업종료 이전 규제법령 정비 추진('23~)
  - \* 기간만료 임박 특구 법령정비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여, 특구별 조치계획 수립
  - 6대 핵심 신산업 분야\* 규제 정비를 위하여 특구 협력 네트워크에서 규제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추진
    - \*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수소,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기 에너지, 비대면 진료

## ③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

- (도전·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4차산업 혁명의 도전을 확대하기 위해 R&D 제도를 신청 → 선정 → 수행 → 종료 등 진행단계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대폭 개편('23~)
  - 신청·선정 단계 우선 적용('23.상) 및 수행·종료 단계는 기업현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 개선, 이행성과 주기적 점검

### < 중소기업 R&D 제도 개편 방안 >

구 분	주요 개선사항
① 신청단계	✓결격요건은 최소화하고, ✓신청절차는 간소화하여,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R&D 참여 기회 확대
② 선정단계	✓평가 전문성은 확보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이 많은 중소기업을 선정
③ 수행단계	✓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비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연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 지원
④ 종료단계	✓R&D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기준을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 (R&D제도 개선) 중소기업 연구자율성 확대를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간의 상호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 ('23~)
  - 연구 부정 및 R&D 연명 無성과 기업 신규 지원 제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환수금 징수기간 단축 및 강제징수 범위 확대
  - \* (납부유예) 2년 → 9개월 / \*\* 기존 예금에서 예금외 부동산 등도 포함
  - 연구비 사전승인은 최소화하고 사용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자율집행 후 연구개발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2.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지역경제 도약 촉진

### ① 중앙-지역 협업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 촉진

- (지역성장 주도기업 육성) 지역별 주축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대표기업 300개 발굴·육성('23~'27)
  - \* 기술 성숙도가 높고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
  - (주축산업) 혁신성·성장성 기준으로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성장지원으로 주축분야의 선도기업 280개 육성
  - (신산업) 미래 신산업 대표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산·학·연 공동 R&D,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 선도기업 20개 육성
- (지역기업 성장프로젝트 추진) 지역이 주도하는 기업육성 프로젝트를 기획, 지역 중기에 필요한 자원을 이어달리기식으로 지원('23~)
  - \*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상황, 지역기업 요구 등을 반영하여 지역의 프로젝트 목표를 결정하고 필요자원 및 역량을 동원
  - 정책분야별 지역 지원기관 간 TF를 구성하여 지원시책 매칭 및 컨베이어 방식의 지원으로 17개 지역, 300개 프로젝트 창출(~'27)
  - \* ('23) 참여 지원기관의 정책 매칭 위주 지원 → ('24~) 프로젝트 전용 예산 검토
- (지역기업 전주기 협업 강화) 지역중소기업간 협업·교류를 강화로 융복합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23~)



- (협업모델 확산) R&D, 인증, 판로, 자금 등 협업 활동 주주기에 연계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 협업모델 100개 이상 발굴
- \* 협업과제 기획 → 협업 매칭 → 기술 및 제품개발 → 사업화 → 생산 → 유통
- (협업기반 구축) 협업매칭 플랫폼 구축, 협업분쟁 방지·조정 지원, 지역의 분야별 우수기업 네트워크 조직화

## ②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 (선제적 사업전환 지원) 사업전환법 을 개정하여 사업전환 대상 인정범위 확대, 다수기업 공동 사업전환 지원 제도 신설('23~)
  - \* 신입종으로의 변경, 추가만 인정 → 동일업종이라도 新제품·서비스 도입 등도 인정
- 구조혁신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자체 등과의 사업전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밀착지원
  - \* ('22) 10개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대전,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창원) → ('27) 전국 확대
- (지역소멸 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23) 및 행안부와 협업('24~) 등으로 위기지역·지역기업 활력 회복 지원
-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데이터 기반 위기 징후 모니터링 확대 및 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사후관리 체계화('23~)
  - (위기 모니터링)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추가 설치, 모니터링 대상(중소기업 밀집지역)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위기 징후 모니터링 확대
  - \* ('22) 5개 지역(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 → ('23) 비수도권 12개 지역으로 확대
  - (체계적 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지역 위기 단계(양호-주의-심각) 결정·위기에방계 획 수립 및 선제적 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 \* 한국은행 등의 융자·보증 우대, 스마트공장 도입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

## 3. 지역 주도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 ① 지역 혁신네트워크 구축

- (정부-지자체 소통·협력 강화) 지방중기청별로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협의체) 구축('23~)
  - 지방중기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원팀으로 지역의 혁신성장 주도
  - \* 지원기관(TP·창경센터·중진공 등), 대학, 연구소, 지역 오피니언 리더, 협·단체 등
- (지자체 홍보 채널 공유)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홍보물을 日단위로 지방청과 공유하고, 지자체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23~)
  - 다양한 지자체 홍보 채널(사업설명회, 지자체 뉴스(SNS)·소식지, 지방산단 알리미, 전광

판 등)을 활용하여 중기부 지역기업 육성정책 전파

## ② 지역기업 성장프로젝트 추진

-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 지역산업·기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기업에 필요한 자원·기관 등의 연계지원 프로젝트 추진('23~)
  - \* 지방중기청과 지자체가 지역기업 동향·산업 전망 등을 분석하여 '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300개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공동 기획
- (프로젝트별TF 구성) 프로젝트별 협약에 의해 TF를 구성하고, 참여기관 간 원팀으로서 경계 없는(seamless) 협업관계 지향('23~)
  -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참여기관인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대학, 시도 연구원, 민간 협·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 유도
  - \*\*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중앙·지방정부 지원사업을 '이어달리기식' 연계하여 기업성장단계별 맞춤 정책지원('23~)

## 4.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원팀 구축

- (핵심미션 설정) 본부·지방청·산하 공공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중점 과제를 선정·공유하여 조부처가 원팀으로 성과창출 기반 구축('23~)
  - \* 기업, 산업, 일자리 분야 정례적 정책협의회를 구성(산업부·고용부 등)하여 주요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공고화
- (상시 소통체계 구축) 중소기업정책 정보를 주요 협·단체 및 약 600개 지역 지원기관을 통해 매주 공유하여 기업현장까지 확산 촉진('23~)
  - \* 월간 중기누리(정책정보 소식지), 유튜브·SNS 홍보 콘텐츠 등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제작하여 13개 지방중기청을 거점으로 확산
- (현장소통 강화) 중소기업주간(3월), 소상공인주간(11월) 등을 계기로 소통을 확대하고 간담회 수시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23~)

## V. 정책 추진일정

정책과제	부처	추진일정
① 우리 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 (글로벌) 중소기업 주도의 단단한 수출강국 실현		
• 디지털 분야 新수출시장 확대	중기부, 문체부 등	'23~
•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수출기업 육성 중기부 '23~		
• 글로벌 해외거점 기반 확충 등 현지진출 활성화	중기부, 금융위 등	'23~
• 무역장벽 대응 등 수출 안전망 확충	중기부, 산업부,	'23~

• 혁신 거점 기술교류 및 협력 R&D 확대 중기부 등 '23~	금융위 등	
-------------------------------------	-------	--

(2)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및 인력양성	중기부	'23~
• AI 기반 제조데이터 활용 및 거래 촉진	중기부	'23~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중기부 기재부 등	'23~
• 민간주도 성과창출형 R&D 지원강화	중기부	'23~
•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중기부 산업부 등	'23~

(3) (함께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 납품대금 연동제 기반마련 및 안착	중기부 공정위 등	'23~
• 자발적 동반성장 문화확산	중기부 동반위 등	'23~
•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	중기부 공정위 등	'23~
•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진입 촉진	중기부 조달청 등	'23~

(4) (위기대응)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 복합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전망 강화	중기부 금융위 등	'23~
•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강화	중기부 탄중위 등	'23~
• 글로벌 기업규범 대응	중기부 산업부 등	'23~

②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1) (글로벌) 세계진출을 지향하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내수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육성	중기부 기재부 등	'23~
• K-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거점 조성	중기부 외교부 등	'23~
•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중기부 법무부 등	'23~
• 글로벌 펀드 확산	중기부 기재부 등	'23~

(2) (디지털)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초격자 프로젝트 본격 추진	중기부	'23~
• TIPS 확대 및 딥테크 분야 신설	중기부	'23~
• 지역기반 창업인프라 강화	중기부	'23~
• 지역투자 활성화	중기부	'23~

(3) (함께성장) 상생협력 기반 新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추진	중기부	'23~
• 사회적 창업가 육성	중기부	'23~
• 협력 프로그램 확산	중기부 대기업 등	'23~
•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중기부 대기업 등	'23~
• CVC 투자 활성화 지원	중기부 대기업 등	'23~

(4) (위기대응) 벤처·스타트업 위기 극복을 위한 스케일업		
• 단계별 정책금융 지원강화	중기부 금융위 등	'23~
• 은행의 투자촉진	중기부 금융위 등	'23~
• 투자회수 활성화	중기부	'23~
•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 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중기부	'23~

## ③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1) (글로벌)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준비된 창업 유도	중기부 국토부 등	'23~
• 유망 소상공인 선별 및 집중지원	중기부	'23~
• 투·융자 자금지원 등을 통한 스케일업	중기부	'23~

## (2)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 소상공인 생업현장 內 스마트기술 도입	중기부	'23~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중기부 국세청 등	'23~
•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중기부 행안부 등	'23~

## (3) (함께성장)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 민간이 주도하는 상권회복 프로젝트	중기부	'23~
• 골목의 성장을 견인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중기부 국토부 등	'23~
• 시대흐름에 맞춘 전통시장 변형	중기부 특허청 등	'23~

## (4) (위기대응)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중기부 금융위 등	'23~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중기부 산업부 등	'23~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및 재해 등 복지혜택 신설	중기부 금융위 등	'23~
•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도전 지원 중기부 '23~		

## ④과감한 규제혁파 및 지역 중소기업 정책 강화

## (1)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

• 전방위적 규제애로 발굴·개선체계 구축	중기부 국토부 등	'23~
• 규제자유특구 성과 창출 촉진	중기부	'23~
• 자유롭게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	중기부	'23~

## (3)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지역경제 도약 촉진

• 중앙-지역 협업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 촉진	중기부 지자체 등	'23~
•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중기부 행안부 등	'23~

## (2) 지역 주도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 혁신네트워크 구축 중기부 '23~		
• 지역기업 성장프로젝트 추진	중기부 국세청 등	'23~

## (3)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원팀 구축

• 핵심미션 설정	중기부	'23~
• 상시 소통체계 구축	중기부	'23~
• 현장소통 강화	중기부	'23~



# 고용증대세액공제 Q&A

- 중소기업부 -

## 【 1 공제여부 】

### 1.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① · § 29의3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 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2021년까지 중소기업(유예 포함)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 2022년일반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초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2020.09.28.)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조특령 § 2①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생략)

※ 사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만 증가, 청년등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미감소

사업연도		×1년	×2년	×3년
상시근로자 수		10	12	14
사례 1)	기업규모	중소 (유예 3년차)	중소 (유예 4년차)	중견
	공제여부			①×2년의 2차분은 중소기업 공제금액으로 적용 ②×3년의 1차분은 중견기업 공제금액으로 적용
사례 2)	기업규모	중견	중견	대기업
	공제여부			①×2년의 2차분은 중견기업 공제금액으로 적용 ②×3년의 1차분은 공제받지 못함

### 3. 2019년 1차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2020년, 2021년도에 각각 2,3차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22년도에 다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고용인원 증가하여 1차년도 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이 2년간 그 인원 수를 유지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몰 종료 전까지 직전 사업연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경우 매년 1차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공제가능 기간을 통틀어 3년간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 4.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였으나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경우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보다 증가하였으면 1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전 사업연도의 고용 감소 여부를 조건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서면-2021-법인-4611, 2021.8.13.).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 5. 2022년 신설법인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도 2022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 6. 2021년 대비 2022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2023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하여 세액공제를 적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적용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법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증감 여부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 7.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전환법인이 세액공제를 승계 받아 2차, 3차 공제 가능한가요?

A.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이 최초 공제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조특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당초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 § 31①④~⑥ · § 32①④ · § 144①, 조특령 § 26의7①~③ ⑦~⑨ · § 28⑧ · § 29②⑥ · § 23⑩⑬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8. 현행 법령대로 2024년에 공제제도가 종료될 경우 2024년까지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아니요.

2024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일몰 종료 시 2023년 1차년도 공제 받은 경우 2025년 3차년도 공제까지 가능하며, 2024년 1차년도 공제 받은 경우 2026년 3차년도 공제까지 가능합니다.(다만, 최초 공제 받은 사업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 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전환 법인이 승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2021-법규법인-0020, 2022.01.25.)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 § 31①④⑥ · § 32①④ · § 144①, 조특령 § 23⑬ · § 26의7 ⑦ · § 29②⑤

## 10.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종사하는 직원의 근로 범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증가인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 § 143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 136①

법법 § 4③ · § 113①⑥, 법인령 § 3① · § 156①, 법칙 § 75② · § 76①, 법통칙 113-156...1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Ⅱ 상시근로자 관련】

**1. 작년 8월 설립등기 후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한 11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연도 월수는**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한 5개월 인가요?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 2개월인가요?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 개월 수인 12개월 인가요?

A.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설립등기일인 8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인 12월까지로 계산한 5개월입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① · § 29의7①

법법 § 6①②⑥, 법인령 § 3①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1)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만3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합니다.

예시) 2022년 7월 20일에 만 30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 외로 계산

=> 2022년 1월 ~ 6월 : 청년 등, 2022년 7월 ~ 12월 : 청년등 외

※ 참고) 정규직이 아니라면 만 30세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

2)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예시) 2020년 4월 10일에 만 30세가 된 경우에도 2021, 2022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는 청년으로 간주하여 청년 감소로 보지 않음(고용증감이 없다고 가정)

### 【2020년 상시근로자 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전체	1	1	1	1	1	1	1	1	1	1	1	1	1
청년	1	1	1										0.25
청년 외				1	1	1	1	1	1	1	1	1	0.75

### 【2021년, 2022년 상시근로자 수】

#### ①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전체	1	1	1	1	1	1	1	1	1	1	1	1	1
청년													-
청년 외	1	1	1	1	1	1	1	1	1	1	1	1	1

#### ② 추가납부세액 대상여부 판정 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전체	1	1	1	1	1	1	1	1	1	1	1	1	1
청년	1	1	1										0.25
청년 외				1	1	1	1	1	1	1	1	1	0.75

→ 청년 감소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조특령 § 26의7⑥⑦ · § 29②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다. (생략)

### 3. 2022.1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규직 직원 한명을 채용하였고, 해당 직원은 2022.6월 중 생일이 지나 만30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1.00명, 청년 등 +0.41명, 청년 등 외 +0.58명으로 계산됩니다. 소수점 차이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법령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0.59명)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1명)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0.41명)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령 § 26의7⑦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_\_\_\_\_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_\_\_\_\_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_\_\_\_\_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_\_\_\_\_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4. 2022년에 65세인 자와 근로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예.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중대시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5.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2년에 6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청년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55세인 동 근로자는 2022년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③

## 6. 직원이 대표자의 사촌동생 아들의 배우자\*인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 5촌 인척

A. 예.

해당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23⑩, 국기령 § 1의2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생략)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4촌으로 개정 예정)

2. 4촌 이내의 인척(3촌으로 개정 예정)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개정으로 추가 예정)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7.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자녀(직계존속)를 채용하였습니다. 임원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나요?

A. 아니요.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용한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최대주주의 자녀 아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8.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자 1명, 근로자 2명 급여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 계산 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요?

A. 아니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2.(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9. 상시근로자 수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나요?

A. 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제외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10. 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할 때 급여 7천만원 이상자는 제외하나요?

A. 아니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조특령 § 26의7②, § 23⑩)는 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세액공제(조특령 § 17),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령 § 29의4)에서는 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11. 장애인은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처럼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장애인의 범위에 중증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12.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를 채용 하였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내외입니다.(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존재)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해당 근로자는 0.5명(특례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생략)

**13. 근로계약은 1년 이상 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A. 예.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14. 정규직이 3개월 만에 퇴사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A. 예.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1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A. 예.

계약을 연장할 때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갱신계약일(재계약)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①②③ · § 23⑩

## 16. 2022년 8월 25일 퇴사자도 8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매월 말 현재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월 25일 퇴사자는 직전 월인 7월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퇴사 월인 8월부터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8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8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⑦⑧ · § 23⑪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중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17.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1명 미만(0.25명)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A. 예.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령 § 26의7⑦

## 18.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나요?

A. 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실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19.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 또는 건강보험 납부사실 중 하나의 납부 사실만 확인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므로 당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국민연금법 § 6

## 20. 22세인 청년을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18개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청년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청년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계약기간 18개월로 근로계약 체결한 해당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3. (생략)

## 21. 해당 월에 만 29세 11개월인 정규직근로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네.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만15세에서 만29세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로, 이때 만29세 이하는 만30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만29세 11개월인 동 근로자는 만30세 미만에 해당하는바 생일이 지나기 전달까지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04.01.)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③

**22. 근로자 파견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청년인 파견근로자는 청년등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인가요?**

A. 아니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파견근로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 § 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2021.12.07.)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③ · § 23⑩

**23. 산업체병력특례제에 따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체병력특례업체가 산업체병력특례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참고) 산업체병력특례제에 따른 근로자(27세)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

**24. 무급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휴직자이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23⑩

**25. 상시근로자로 보는 직원이 근무 중에 군입대로 휴직하고, 그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군복무 휴직한 직원이 군복무 기간 중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참고)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가능(국민연금법제91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 26.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육아휴직한 직원이 육아휴직기간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참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가능(국민연금법제91조)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납입고지 유예 가능(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사전-2020-법령해석법 인-0272, 2020.6.22.)

## 27.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납부유예 하지 않고 납부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28.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창업으로 보아 '0'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은 조특법 제29조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인-3499, 2020.09.11.)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조특령 § 26의7② · § 23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참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서면-2020-법인-1813 2020.07.23.)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29.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값에서 법인 전환 전 기간의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2021.06.16.)

<관련법령> 조특법 § 6⑩ · § 29의7①②⑤, 조특령 § 26의7⑦⑨ · § 23⑬

※ 참고) 개인 8월 개업 후 12월에 법인 전환(12월 설립등기)

① (개인)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0명,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명

② (법인)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명,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11명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총계	-	16명	7명	17명	15명	11명 $[(0+16+7+17+15)/5]$
개인사업자	-	16명	7명	17명		10명 $[(0+16+7+17)/4]$
법인사업자					15명	15명

**30.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데, 해당 과세연도 중 동일한 근로자가 퇴사 및 재입사한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A. 퇴사 및 재입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 종료되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는 명확화 규정으로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됩니다. (서면-2022-법규법인-0488, 2022.05.1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법률 제16835호 개정 전후(2019.12.31.)의 조항 비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 ~ (생략) ~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① 내국인 ~ (생략) ~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Ⅲ 공제세액 계산방법】

#### 1.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공제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A.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2차년도부터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분에 해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 수도권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가정 시 400만원\* 추가 납부하여야 함

\* 1명(2명 증가분 한도) × (1,100만원-700만원) = 400만원

구분	'20	'21	'22
상시근로자	3	5	5
청년등 상시근로자	1	3(+2)	2(-1)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2	2(+1)	3(+1)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②, 조특령 § 27의6⑤⑥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2.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A. 예.

10년동안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1항(일부 발췌)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3. 사업장이 수도권 내와 수도권외로 각각 있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수도권 내 사업장 : 상시 +2명, 청년등 +2명, 수도권 외 사업장 : 상시 -1명, 청년등 -명)

A.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계산 시 공제금액은 수도권 내외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하나,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1명)를 한도로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청년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 (예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본점에서 2명 청년 증가, 지점에서 1명 청년 감소 시 공제금액

① 본점 : 1명(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한도) × 1,100만원 = 1,100만원

② 지점 : -

### 4. 수도권 내 사업장(본점)과 수도권 외 사업장(지점)이 있는 법인입니다.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으면 전체 사업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건가요?

A.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계산 시 공제금액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본점에서 증가한 인원은 수도권 내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지점에서 증가한 인원은 수도권 외 공제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 (예시) 본점에서 2명 청년 증가, 지점에서 3명 청년 증가 시 공제금액

공제금액(㉠+㉡) : 5,800만원 ('21 · '22년은 6,100만원)

㉠ 본점 : 2명 × 1,100만원 = 2,200만원

㉡ 지점 : 3명 × 1,200만원 ('21 · '22년은 1,300만원) = 3,600만원('21 · '22년은 3,900만원)

## 5. 수도권 내 사업장 : 상시 +10명, 청년등 -5명, 청년등 외 +15명

수도권 외 사업장 : 상시 +2명, 청년등 +1명, 청년등 외 +1명

**중소법인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는 증가(+12명)하였으나 청년등이 감소(-4명)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사업장별로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 내에서 청년등 증가인원 수를 산정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되, 법인 전체의 청년등 인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특정 사업장의 청년등 증가인원을 청년 등 외로 보아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2020.12.14.)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④,⑤, 조특령 § 26의7③,⑦

※ 공제액 계산(㉠+㉡) : 8,540만원

㉠ 수도권 내 사업장 : 10명 × 700만원 = 7,000만원

㉡ 수도권 외 사업장 : 2명 × 770만원 = 1,540만원

구분	수도권 내 증감	수도권 외 증감	전체 증감
상시근로자	10	2	12
청년등 상시근로자	-5	1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15	1	16

## 6. 사업연도 중 법인이 수도권 내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안분계산 하나요?

A. 아니요.

법령에 지역 변동에 따른 별도의 안분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연도 종료일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



**7.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인 중소기업입니다. 직전 사업연도(2021.12.) 대비 해당 사업연도(2022.06.)에 청년근로자 1명이 증가한 경우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안> 1(명) × 1,100(만원) = 1,100(만원)**

**<2안> 1(명) × 1,100(만원) × 6/12 = 550(만원)**

A. <2안>

사업연도 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 개월 수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조특령 § 26의7⑦, 법법 § 7①②③

※ 사업연도 변경 시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서면-2022-법규법인-2972, 2022.12.30.)

\* 2021.1.1.~2021.12.31.(2기), 2022.1.1.~2022.3.31.(3기), 2022.4.1.~2023.3.31.(4기), 2023.4.1.~2024.3.31.(5기)

**8. (Q7에서 계속)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06.) 대비 해당과세연도(2022.12.)에 그 인원을 유지한 경우 추가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안> 1,100(만원)**

**<2안> 550(만원)**

A. <2안>

사업연도 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 개월 수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조특령 § 26의7⑦, 법법 § 7①,②,③

※ 사업연도 변경 시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서면-2022-법규법인-2972, 2022.12.30.)

\* 2021.1.1.~2021.12.31.(2기), 2022.1.1.~2022.3.31.(3기), 2022.4.1.~2023.3.31.(4기), 2023.4.1.~2024.3.31.(5기)

**9.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변경 시 추가공제 적용 방법과 사후관리기한은?**

**\* 사업연도 변경내역 :**

**2020.7.7.~2020.12.31.(제1기), 2021.1.1.~2021.12.31.**

**(제2기), 2022.1.1.~2022.3.31.(제3기),**

## 2022.4.1.~2023.3.31.(제4기), 2023.4.1.~2024.3.31.(제5기)

- A. 2021.1.1.~2021.12.31. 사업연도(제2기) 최초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추가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3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제5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9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24.3.31.)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22-법규법인-2972, 2022.12.30.)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조특령 § 26의7⑦, 법법 § 7①②③

### 10. 청년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20년 대비 증가하여 '21년에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2년 청년등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 수가 증가(유지 포함)한 경우 추가공제 적용 방법은?

### 11. 청년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20년 대비 증가하여 '21년에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2년 고용 변동없이 연령 증가로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적용 방법은?

- A.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등 공제액 기준(조특법 § 29의7①1)으로 공제는 못 받지만 청년등 외 공제액(조특법 § 29의7①2)을 적용하여 공제는 가능합니다.(조세 특례제도과-214, 2023.03.06.)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조특령 § 26의7⑦

※ 사례) 수도권 내 중소기업으로 '21년에 29세 청년을 채용했으나 '22년에 30세가 되어 청년근로자 감소  
'21년 공제액 : 4,700만원(3명 × 1,100만원 + 2명 × 700만원)

'22년 공제액 : 1) 1차년도 공제 : 700만원(1명 × 700만원)

2) 2차년도 공제 : 3,500만원(5명 × 700만원)

구 분	'20	'21(전년대비)	'22(전년대비)
상시근로자	3	8 (+5)	9 (+1)
청년등 상시근로자	2	5 (+3)	4 (△1)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1	3 (+2)	5 (+2)

## 【Ⅳ 납부세액 계산방법】

### 1.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건가요?

A. 아니요.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보다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 소득-478, 2020.10.21., 서면-2020-법인-5929, 2021.07.29.)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조특령 § 26의7⑤

조특법 § 30의4③(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 나. (생략)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 나. (생략)

※ (예시) 고용증대세액공제 4.9억원 중 최저한세액 미달로 1.1억 공제, 3.8억원 이월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2.1억 납부 방법

→ ①공제받은 1.1억원을 납부하고, ②나머지 1억원을 이월공제세액 3.8억원에서 차감

### 2.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보다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납부하며 가산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조특령 § 26의7⑤

### 3.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법인에서 추가납부 해야 하는지?

A. 예.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조특법 § 32)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승계 받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여 세액공제액 승계 가능하며, 법인 전환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개인사업자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법인에서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 § 31①④~⑥ · § 32①④ · § 144①, 조특령 § 26의7①~③  
⑦~⑨ · § 28⑧ · § 29②⑥ · § 23⑩⑬

※ (참고) 고용중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5.11.)

### 4.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설립된 법인이 공제를 승계 받은 후 2차, 3차 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요?

A. 예.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차, 3차 공제 시 최초 공제받았던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 § 29의7①② · § 31①④~⑥ · § 32①④ · § 144①, 조특령 § 26의7①~③  
⑦~⑨ · § 28⑧ · § 29②⑥ · § 23⑩⑬,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2021.05.11.)

### 5.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19년 대비 '20년에 청년 2명, 청년 외 2명 증가하여 세액공제(1,100×2, 700×2)를 받았으나, '21년에 '20년 대비 청년 외 2명 감소하여 청년 외 2명에 대한 공제분 납부(700×2) 하였습니다. '22년에 '20년 대비 청년 2명 감소 및 청년 외 1명 감소한 경우

갑설) 청년 감소로 인해 청년 감소분(1,100×2)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지

을설) 청년 감소 1과 청년 외 감소분과의 차액을 납부1,100+(1,100-700)×1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청년	3	5(+2)	5	3(Δ2)
청년 외	5	7(+2)	5(Δ2)	6(Δ1)
전체	8	12	10	9

## A. 갑설

이미 '21년에 청년 외 2명 감소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전액 추가납부 하였으므로 '22년에 감소한 청년 외 1명 감소분은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년 2명 감소분에 대한 금액( $1,100 \times 2$ )만 추가납부하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1일(화)	8월 2일(수)	8월 3일(목)	8월 4일(금)	8월 7일(월)
미 달 러 (USD)	1,273.80	1,280.70	1,293.00	1,298.80	1,303.90
위 안 화 (CNH)	178.29	178.63	179.95	180.47	181.53
일 본 엔 (JPY)	859.18	896.00	902.78	911.02	919.05
유 로 화 (EUR)	1,401.12	1,409.67	1,415.06	1,422.45	1,434.68
영 국 파 운 드 (GBP)	1,635.18	1,637.82	1,644.18	1,651.10	1,662.47
캐 나 다 달 러 (CAD)	965.70	964.89	968.87	972.74	974.66
홍 콩 달 러 (HKD)	163.34	164.31	165.74	166.35	166.93

통 화 명	8월 8일(화)	8월 9일(수)	8월 10일(목)	8월 11일(금)	8월 14일(월)
미 달 러 (USD)	1,304.10	1,312.60	1,318.30	1,317.30	1,321.10
위 안 화 (CNH)	181.16	181.90	182.64	182.32	182.59
일 본 엔 (JPY)	915.58	916.08	917.49	909.77	911.70
유 로 화 (EUR)	1,434.97	1,437.95	1,446.97	1,446.72	1,445.68
영 국 파 운 드 (GBP)	1,666.77	1,672.71	1,676.68	1,669.22	1,676.48
캐 나 다 달 러 (CAD)	975.25	977.84	982.34	979.66	982.92
홍 콩 달 러 (HKD)	167.04	167.98	168.56	168.46	168.98

통 화 명	8월 16일(수)	8월 17일(목)	8월 18일(금)	8월 21일(월)	8월 22일(화)	8월 23일(수)
미 달 러 (USD)	1,331.30	1,338.30	1,341.60	1,336.90	1,341.50	1,338.70
위 안 화 (CNH)	183.28	182.83	182.80	183.27	183.13	183.37
일 본 엔 (JPY)	914.26	914.80	920.76	919.75	917.48	918.05
유 로 화 (EUR)	1,451.52	1,455.87	1,458.78	1,453.54	1,461.83	1,452.02
영 국 파 운 드 (GBP)	1,690.75	1,703.79	1,709.94	1,702.68	1,711.75	1,704.23
캐 나 다 달 러 (CAD)	986.51	988.84	990.33	986.75	990.48	988.01
홍 콩 달 러 (HKD)	170.16	170.89	171.34	170.68	171.13	170.80

통 화 명	8월 24일(목)	8월 25일(금)	8월 28일(월)	8월 29일(화)	8월 30일(수)	8월 31일(목)
미 달 러 (USD)	1,338.00	1,324.00	1,326.60	1,322.50	1,322.00	1,321.40
위 안 화 (CNH)	183.29	181.54	182.10	181.65	181.34	181.09
일 본 엔 (JPY)	924.38	906.88	905.00	903.13	906.69	905.07
유 로 화 (EUR)	1,453.60	1,429.52	1,431.93	1,431.80	1,438.86	1,444.36
영 국 파 운 드 (GBP)	1,701.74	1,666.78	1,668.86	1,667.67	1,672.26	1,681.15
캐 나 다 달 러 (CAD)	989.21	974.46	975.58	972.32	975.25	976.28
홍 콩 달 러 (HKD)	170.65	168.85	169.13	168.56	168.48	168.41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i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